

인권정보자료실
Mml.1

심포지엄

해외동포와 한국민주화운동

일시

2001년 11월 29일(목) 14:00 ~ 18:00

장소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주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자료관



주관

국제민주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 송두울교수귀국추진위원회 / 양심수후원회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통일맞이

후원

성공회대학교 / 월간말 / 민족21 / 통일뉴스 / 한겨레신문사

Mml.1

심포지엄

해외동포와 한국민주화운동

일시

2001년 11월 29일(목) 14:00 ~ 18:00

장소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주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자료관

진행순서

개막식 (14:00 - 14:30)

사회 : 이기욱(한통련대책위 집행위원장, 변호사)

- ▶ 개회선언 / 민주미래
- ▶ 개회사 : 김성수(성공회대학교 총장)
- ▶ 내빈소개
- ▶ 인사말 : 고영구(한통련대책위 공동대표, 변호사)
- ▶ 축사 : 이창복(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오종열(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박정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심포지엄

사회 :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目 기조강연 (14:30-14:50) : 『한국민주화운동에서 해외동포의 역할』 홍근수(향린교회 당회장)

- ▶ 1부 『미국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 (15:00 - 15:40)
발표 : 김민웅 (뉴욕 길벗교회 목사)
토론 : 윤한봉 (민족미래연구소 소장)
- ▶ 2부 『일본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 (15:40 - 16:20)
발표 : 임병택 (홋카이도 삿포로시 시정연구소 사무국장)
토론 : 나가키따 (변호사)
- ▶ 3부 『유럽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 (16:20 - 17:00)
발표 : 이종수 (광주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
토론 :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目 종합토론 (17:10 - 18:00)

사회 : 정해구(성공회대학교 교수)
전체 발표자, 토론자와 임종인(변호사) 참가

리셉션 (18:30 - 19:30)

목 차

- 발제 1 「미국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 김민웅 2
- 발제 2 「일본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 임병택 12
- 발제 3 「유럽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 이종수 32
- 한통련 과동의 의장 메시지 41
- 자료 1 「미주동포운동사」 44
- 자료 2 「제일동포운동사」 53
- 자료 3 「제일한통련의 진실」 59
(월간 말 2000. 10)
- 자료 4 「과동의 한통련 의장 인터뷰」 65
(월간 말 2000. 10)
- 자료 5 「유럽동포운동의 뿌리와 역사를 찾아서 1」 71
(월간 말 2001. 1)
- 자료 6 「유럽동포운동의 뿌리와 역사를 찾아서 2」 83
(월간 말 2001. 2)
- 자료 7 한통련 민족서보 기사 91

미국에서의 한국 민주화 운동

김민용 (뉴욕저 길벗교회 담임, 제퍼슨론인 Ph. D.)

1. 민주화 운동, 현재 진행형적 사건으로 파악되어야

우선 그간 우리의 현대사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리에서는 사각지대처럼 인식되어온 해외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기쁨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하나로서 이제서야 비로소 풀어놓는 과거 회상식 감회로서가 아니라, 오늘의 논의를 통해 해외 민주화운동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평가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현대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우리민족의 운명에 직간접으로 결정적이다시피 영향력을 발휘해온 미국의 문제가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미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궁극적 경계선에는 바로 이 <제국적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의 문제>가 엄연히 존재해 있고,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은 또한 우리의 현실, 그 핵심을 관리하는 식민지 주둔군처럼 들어와 있는 미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없이는 여전히 일정한 제약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결국 미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처해 있었던 어려움과 그런 가운데서도 이루어 낸 나름의 공적, 그리고 한계를 동시에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란 과거의 한 시기에 군부정권에서 민간정권으로의 정권교체로 그 목적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역사적 단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현재 진행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으로 인식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실 오늘의 세계적, 민족적 현실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때의 역사적 한 과정에서나 의미가 있었던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에도 여전히 필요한 과제를 제기하고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절박하게 필요한 동력의 하나로 이 운동의 의미를 살려내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오늘날 민주주의는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개시된 이래 세계정세는 물론이고, 특히 미국의 국내 상황은 특히 안보 논리, 전쟁 논리가 우위를 점하면서 인권과 기본권의 침해가 벌어지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논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시정권의 전쟁정책에 대한 지식인 사회의 비판은 이른바 <애국주의>라고 하는 전쟁지지 물결 내지는 대중선동의 대세에 휩싸여 매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통령 딕 체니의 부인인 린 체니는 대학 순회강연을 하면서 일부 지식인들이 애국적이 아니라고 공격하고, 이들이 미국의 전쟁 수행정책을 비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명단과 기고문 내용까지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들이 테러를 비난하기보다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이들의 비애국적 행동을 규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1월 13일 통과된 소위 <애국법안>은 전쟁 개시 전 부시정부가 주장했던 경찰과 정보기능의 강화를 거의 그대로 담은 법안입니다. 이것은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미국 시민 사찰이나 체포 또는 구금 과정에서 판사의 개입을 최소화시킨 것으로서 정부의 의도대로 경찰, 정보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안 자체의 이름이 애국법안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법안은 비애국적인 시민들을 색출해내는 사법적 장치입니다. 오늘날의 미국 현실에서 비애국적이라는 것은 부시정권의 전쟁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미국의 전쟁 정책을 찬동하지 않은 것은 곧 테러지지자라는 이분법적 분류방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기한 구금당할 수 있기 조차해서 일부에서는 미국이 경찰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이 법안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한인 동포사회는 이러한 사법적 조처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숨죽이고 있습니다.

성조기의 물결이 위협적이기조차 한 상황에서 한인들은 가정과 상가에 성조기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얼마 전, 테러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군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군사재판 회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세계 어느 나라의 개인이나 집단도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경우, 테러 혐의를 받아 미국의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등의 기능을 압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조처를 취한 이유는 테러 혐의자를 일반재판이나 국제법정에 세우게 될 경우 미국에게 불리한 주장과 증거가 제시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재판은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비밀재판이 됩니다. 또한 혐의의 개념 규정이나 증거채택의 기준도 모두 미국정부의 자의로 결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것은 증거로 충분하다고 하면 그것은 증거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미국 마음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에게 테러혐의나 관련자로 찍힌 사람은 일체의 국가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미국의 군사법정에 끌려 올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미국의 군사법정이라는 것도 반드시 미국 본토 대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함정,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진정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 논리는 우리 나라에도 그대로 강요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한 무기강매에 따른 민족 자원의 낭비는 물론이요,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키기 위한 작업은 전쟁논리, 안보논리에 의해 후퇴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논란되고 있는 <테러 방지법안>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원본은 미국의 애국법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이 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민주적 토론과 합의가 가능한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투기적이고 초국적인 자본의 지배가 우리 민족의 이해를 굴복시키면서 관철되고 그로써 강력하게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순응한 결과 이 나라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본에 의해 저버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로써 민주주의의 원칙, 즉 그 나라의 구성원은 누구나 차별 없이 그 공동체의 정치경제적 발언권과 기본권을 존중,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가장의 가출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로 대변되고 있는 기본권의 붕괴가 속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 우리의 민주화 운동이 그토록 희생을 치르면서 목표로 삼았던 군부정권의 청산과 민간정권의 성립으로 그 운동의 역할이 끝나고 완성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 부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의 발제는 그러한 시각과 근거에 의해 미국에서의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대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과제를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성공회대학 사회문화 연구소에서 펴낸 "한국사회 재인식 2" 조희연 편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중에서 마지막 보론으로 수록된 저의 글 "민주주의와 미국의 대한정책,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미국 내 한국인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공헌, 그리고 그 한계

(1) 독립운동의 맥락

미국에서의 한인 동포들이 최초로 시작한 운동이라고 한다면 역시 일제 식민지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은 1945년 우리가 일제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이후 미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씨앗을 뿌림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심

화시켰습니다. 미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의 가슴속에는 미주지역에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헌신했던 과거 독립운동의 열기가 그 분이 되었고,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분들의 개인사도 그 성장기에 독립운동과 맥을 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군출신의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에 저항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박정희 체제의 등장과 민주화 운동의 제1단계

미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고 대중적 기반을 확대해나간 것은 박정희 시대였으나, 이보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도산 안창호 계열의 독립운동을 계승하고 있던 세력의 일부가 이승만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보였던 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이승만과 미국의 일체감이 워낙 강했고, 미국 내에 한 인동포사회의 기반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등장은 이러한 현실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박정희 체제의 등장은 적지 않은 정치적 망명자 그룹을 만들어냈고 이들은 미국 내 반 박정희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가령 장면 정권과 관련되어 있던 인사들이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이른바 반혁명 사건으로 연루되었던 인사들이 미국에서의 정치적 망명자 그룹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반 박정희 세력의 망명지로서, 그리고 이들 망명자들의 집결에 따른 이른바 반박(反朴) 운동의 근거지로 기능하게 되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은 이후 김대중 구명 운동을 비롯하여 정치적 망명자의 신세였던 김대중의 미국 체류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기개, 망명자들의 반정부 정서,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김대중과 같은 명망가의 등장은 미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에 매우 중요한 대중적 영향력을 갖게 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국내에 군부정권이 등장한 6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이라고 할 만한 조직적 움직임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일부 소수의 망명자 그룹들의 성명서 발표나 언론기고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국내에서는 이른바 이들을 지목하는 <반한 인사>라는 말이 언론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고, 박정희 정권의 시선이 미국 내 동포사회의 움직임에도 촉각을 세우기 시작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군부정권에 대한 60년대적인 규모와 범위는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신체제의 성립을 기폭제로 하여 미국의 동포사회는 한국정치의 움직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고 역동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기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던 이민을 기반으로 동포 사회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정서라는 것이 한국 상황에 대한 절망과 환멸에서 비롯되었던 점이 작용하면서 민주화 운동의 기본조건이 성립되었

던 것입니다. 박정희의 장기집권 3선이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영구집권을 목표로 하는 유신체제의 성립은 미국 동포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공동체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교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화 운동을 그 반발로 결성하게 했고 이들의 주축은 당시 나이 4-50대 장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대 학생 운동가들의 열정을 가지고 반 군사독재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주력했던 것은 첫째, 반 군부정권 시위 등을 통해서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둘째, 미국 정부에 군부정권 지원 반대를 표명하고 요구하는 일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 특히 국내 목요 기도회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집회의 어려움을 겪자 이를 미국에서 그대로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뉴욕에 목요기도회가 결성되면서 그간 산발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던 운동의 중심이 보다 뚜렷하게 형성됩니다. 기독교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나간 이 운동에 미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미국 정가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미 교회협의회 회장을 지낸 이승만 목사의 활약등도 이 시기 이미 뚜렷한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미국 내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과의 채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민주화 운동의 목소리가 미국 정치인들의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낳게 했고, 이들과의 인맥이 만들어지면서 민주화 운동의 정치적 비중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체제가 미국 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보수집과 동향 분석 등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목소리는 말하자면 박정희 체제의 실상에 대한 고발이었고, 그 고발에 접한 미국이 박정희 체제에 통치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박정희 체제의 권위와 역량 약화를 의미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민주화 운동은 박정희에게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령, 미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공여 하면서 로비 활동을 벌였던 이른바 <박동선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민주화 운동의 여론에 영향을 받은 미국 의회 내의 반박(反朴) 기류를 관리하려는 차원에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대의 민주화 운동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후 김대중의 미국 체류기간 중에 그에게 우호적인 미국 내 인맥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민주화 운동의 기본 인식과 전제는 "미국은 한국의 민주화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사정을 제대로 잘 몰라서 그렇지 보다 정확하게 알면 군부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한국 민주화에 긍정적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이 시기 민주화 운동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미국을 끌어 들이려는 이른바 청원주의적 발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그 나름의 일정한 역할이 있었으나 이후 운동의 주체성과 관련해서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80년 광주항쟁 이후의 민주화 운동 제2단계

그런데 광주 항쟁과 학살이 일어나고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들어선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은 이와 같은 70년대 운동의 기본 인식과 일정하게 갈등하고 투쟁하는 가운데 이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그때까지는 반 유신 운동이면 다 되었던 상황에서 소위 운동노선의 문제가 제기되고, 운동의 중심과제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었으며 운동의 주도권과 관련한 긴장과 대립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분단의 문제를 민주화 운동과 어떻게 관련시켜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체제만 붕괴되면 다 잘 풀리겠지 했던 단순하고 안이한 정세인식은 광주항쟁과 학살, 그리고 군부정권의 재등장으로 혼란에 빠졌고,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격변기의 의미를 지녔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당시 민주화 운동의 주요한 작업은 광주학살의 진상을 동포대중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 내 민주화 운동 발전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로 서경석과 윤한봉의 등장이 있게 됩니다. 서경석은 보수적 기독교계의 흐름을 주도한 반면, 윤한봉은 보다 진보적 입장에서 민주화 운동에 통일운동의 요소를 추가하는 일에 열정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윤한봉의 경우, 그가 광주항쟁의 중심에 있었고 밀항과 망명이라는 극적 요소로 인해 단번에 미국 내 민주화 운동의 주목을 받았고 그의 현장 경험은 미국 내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방향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오래 살고 있던 기독교계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미국 내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주역의 위치로 부상했던 이 두 사람의 노선상의 차이는 이후 미국 내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분열의 요인이 되었고, 냉전체제의 극복과 관련하여 치열한 이념논쟁을 유발시키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운동노선의 명확한 설정이 중요하긴 했으나 대중들을 포괄적으로 결합시키는 과제는 이로써 어려움을 겪었고 운동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외형적 운동의 발전 못지 않게 내부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도 깊어졌습니다. 또한 이들 두 사람만 아니라 한편, 문동환, 박상증, 한완상 등의 미국 체류도 미국 내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 기독교 지식인들의 결집을 주도했고 국내 민주화 운동 지지를 위한 해외의 대중적 기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교계 지도자들과 정계 인사들의 인맥을 넓혀 미국 내 민주화 운동의 보다 깊숙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일조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의 국내귀환은 해외 민주화 운동의 인맥을 국내와 연결시키는 작업에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미국의 민주화 운동이 국내 민주화 운동에 재정적, 인적 지원의 일정한 기반이 되었던 것도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미국 내 민주화 운동 속에서는 광주학살과 관련한 미국의 책임을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하라는 운동까지 등장하는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 당국의 지원을 호소해온 청원주의적 방식에 기대를 걸어온 미국 내 민주화 운동의 기존 주류세력으로서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는 사태의 전개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분단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일이 한국 민주주의 문제해결에 보다 중심 되는 현안이라고 인식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사실 70년대 중반부터 이미 시작한 일이었으며 동부지역의 일부 인사들을 비롯하여 주로 서부지역의 민주화 운동이 이러한 작업의 선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작업의 첫 단계로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민주화 운동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과 함께 분열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일본 체류 시기 한민통과의 관련으로 인해 색깔 논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던 김대중 지지세력의 반발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일은 미국 내 민주화 운동이 친북 세력으로 몰려 한국 민주화 운동에 제약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대중들의 지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통일운동으로의 발전은 현실에서 국가 보안법적 제약이 없는 미국 내 민주화 운동에게 맡겨진 특별한 역할임을 강조하는 측과, 그렇게 하다가는 민주화 운동 자체의 붕괴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측으로 나뉘어 민주화 운동권 내부에서 <선민주 후통일> 그리고 <친북논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기존의 민주화 운동 세력내부에서는 미국 내 민주화 운동의 순수성을 해치는 반미운동 내지는 친북적 통일운동이 침투했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이러한 움직임을 가려내는 일이 민주화 운동의 대중적 역량을 보호하는 일에 중요한 관건으로 여겨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민주화 운동세력 내부에서는 통일운동 그룹을 배제해 나가려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현실에서 “빨갱이”로 매도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와, 이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게 되었던 것이고, 양자는 서로 가는 길이 달라지는 숙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고, 그 인맥형성과 북한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나간 사실이 여러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 민주화 운동의 성격이 70년대의 군부정권 지원 반대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미국과 군부정권의 친화적 관계를 문제시하고 있으며 분단문제와 미국의 책임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을 심각하게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시기 미국 내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언론활동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는 한국 정세나 비판 등을 국내에 알리는 일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의 군부정권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일에 열중했고 국내에서 발표할 수 없는 문건이나 자료 등을 미국 내에서 출간하여 다시 국내로 들여보내는 작업이 미국 내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지하문건들을 묶어 출간하여 미국 내 동포사회에 배포하여 민주화 운동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일 또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지역에서 기독교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목요기도회의 핵심 인사의 하나였던 김정순이 중심이 된 <갈릴리 문고>, 이 시기 <동아일보 미주판>은 동포사회 내부의 한국 민주화 운동 지원 여론 조성에 있어서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운동은 오늘에 이르러 가령 노길남을 중심으로 서부 지역에서 태동한 인터넷 언론 <민족통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4) 민주화 운동의 쇠퇴기와 새로운 운동의 성장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민주화 운동은 다소 이완의 시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노태우 정권의 통치방식이 전두환 정권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했고 따라서 대중들의 반군사정권 투쟁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일에 응집력을 갖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김영삼 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민주화 운동은 운동의 목표가 달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 이해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운동적 목표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대중적으로도 새로운 기폭제가 없다는 점에서 급격하게 대중적 영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 것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민주화 운동의 기존세력으로부터 색깔논쟁으로 인해 배척되었던, 통일운동으로 뻗어나간 세력들은 분단상황의 미해결로 인해 여전히 운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통일 운동은 아직도 색깔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며, 북한의 미국 내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의혹 내지는 가능성으로 인해 미주 동포사회 내부에서 전폭적인 기반을 갖는 작업에 있어서는 한계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던 민주화 운동의 주류가 민간정부의 등장과 민주화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기대했다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의 출현으로 그 운동적 생명력을 잃고 만 것과는 대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냉전체제의 본질과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방식보다는 군부체제의 청산이 곧 민주주의라고 이해했던 운동세력은 90년대 중반에 그 소임을 다했고 여기고 해체되었던 반면에 통일운동의 방향으로 운동 목표를 이동시킨 세력은 민간정권이 들어섰어도 미국의 패권적 지배체제와 냉전의 유지는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라고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통일운동권의 일부 인사는 과거 군부정권 당시 일부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그랬듯이 입국 불허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주의가 환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이들은 친북 인사로 정부가 분류하고 있는 인물들로서 예를 들어 거론하

자면 고 임창영, 선우학원, 양은식, 얼마 전 작고한 홍동근, 그리고 최근 입국이 불허되었던 한호석 등등입니다.

3. 평가와 과제

아무튼 이렇게 일별 해 본 미국내의 민주화 운동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부의 여론, 동포사회의 여론, 그리고 미국의 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민주화 운동 지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미국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 쏟은 열정과 헌신, 그리고 개인적 희생은 귀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주 동포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이 제1세대의 경우, 자신의 생존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급급한 판국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란 쉽지 않은 일이고 대체로 보수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념논쟁에 국내보다 더욱 민감해 운동의 어려움은 한국 현상의 처지와는 또 다른 현실에 있습니다. 국가폭력의 위협이 직접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멀리 떨어진 조국의 문제를 붙들고 운동을 벌인다는 것의 한계와 막막함이 때로 미주 동포사회의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깊은 고뇌를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자리 매김을 우리의 현대사에서 제대로 하는 작업은 이들의 개인사적으로도 대단히 감격적인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과 함께 우리는 미국 내 민주화 운동이 미국의 패권정책을 보다 깊이 직시하고 분석하며 이것이 우리민족의 운명과 민주주의의 장래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에는 관심이 부족했거나 또는 역부족이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90년대 초반, 라틴 아메리카 민주화 운동권의 역량과 수준에 놀라웠던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이 축적해놓은 미국의 대 라틴 아메리카 정책에 대한 분석, 군부정권 지원의 현황,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와 인맥형성 등등을 보면서 우리의 민주화 운동 역량이 처한 부족함을 절감했었습니다. 미국의 제3세계 군부 정권 육성과 지원에 대한 글을 이 시기 <말>지에 두 번에 걸쳐 장문으로 쓸 수 있었던 것도 라틴 아메리카 운동권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에 미국이 어떤 의미와 역할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민주화 운동은 이제 90년대적인 수준과 상황을 극복하고 매우 새롭게 민주화 운동의 역량을 추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시기의 민주화 운동이 주된 목표로 삼은 것이 미국의 패권전략과 종속적 동맹관계에 있던 군부정권의 청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정권시대의 청산, 내지는 잔재 극복이 곧 민주주의의 실현은 아닙니다. 군부정권 이후에 등장한 민간정권의 성격에 있어서 우리는 한국 민주화의 근본 조건인 냉전체

제 해체에 중대한 한계를 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화 운동은 미국의 영향력을 보다 강하게 우리 내부에 끌어들이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원해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의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 희망했던 군부정권의 청산은 이루어졌으나 그 군부정권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미국의 패권전략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강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사적 장치로 지배했던 과거의 양식을 바꾸어 자본의 직접 지배로 전환,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다수의 정치경제적 결정권을 박탈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이번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기로 우리에게 전쟁논리를 보다 강화하려고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과거의 운동역량을 계승 발전해야 할 민주화 운동은 미국의 대한정책을 본질적으로 규명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도를 내놓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 25일자 뉴욕 타임즈지 주말판 세계정세 해설판에는 "탈레반 이후 북한을 잊지 말라!"면서 대북 강공책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연구와 그 성과의 축적을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는 폭력, 억압, 착취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여 정치사회적 해결역량을 길러나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민주화 운동 성장과정에서 얻은 결실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 대한 연구의 절박성입니다. 거대한 제국이 허용하는 자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정당하게 주어지고 보장되어야 할 민주적 권리를 확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반 패권적 민주화 운동, 다시 말해서 반 세계화 운동과 반전 평화운동의 전통과 새로운 집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과도 보다 역동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세계현실에 대해 미국 대중들을 일깨울 수 있는 노력, 가령 미국 내에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에 글을 기고하는 등의 힘을 길러나감과 함께 우리들의 젊은 역량들이 무수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는데 이들에게 이와 관련한 사명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적 현실에서 있는 우리의 민주화 운동은 그리하여 신자유주의의 폭력과 전쟁주의자들의 억압적 체제가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민주주의적 장래를 짓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미국의 민주화 운동이 겪어왔고 종국적으로 도달한 지점, 즉 미국의 제국적 패권체제의 손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도, 우리의 민족적 과제의 해결도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보다 분명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부딪힌 세계적, 민족적 현실을 극복해나가는 일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항쟁과 제일한국인

林柄澤 (삿포로 市政研究所)

1980년 5월25일 삿포로에서의 연대집회

5월18일에 시작된 광주 학생 시민의 민주화요구 데모에 대한 계엄군, 공수부대의 무차별적인 학살과 만행은 시미느이 격분을 사고, 광주항쟁으로 발전하였다. 광범위한 시민의 꺾기에 의해 코윈이 된 광주시에 계엄군의 돌입이 전해져 긴박했던 전날 25일 삿포로의 중심부인 오도오리(大通)공원에서 「한국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고, 광주 학생 시민의 항쟁에 연대하는 긴급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참가자 70명이라고 하는 작은 규모의 것이었지만 긴장한 정세를 받아 열기가 넘치는 것이었다. 각 운동단체로부터 호소가 잇달았으며 한일 연대 단체는 「일본인으로서, 한국 민중의 항쟁에 부응하는 항쟁을 창출해 연대하자」고 호소하고, 최후에 당시 제일 한국청년동맹 홋카이도 본부 위원장이었던 나는 「지금 광주는 불타고 있다.

나는 시민에게 충기를 들이던 계엄군에게 분노를 느끼며, 살상당한 민중의 관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이나 여성들까지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오늘 여러분의 함성은 광주의 거리에 울려 퍼질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집회 후 참가자는 가두데모 행진으로 이동해서, 「한일 민중의 연대, 민주화 투쟁지지, 비상 계엄령 반대, 정치범 석방」이라는 슬로건을 바다 건너 광주에 울릴 정도로 외쳤다. 나는 이때 조국의 땅, 광주가 격동의 광풍에 휩싸여 있는 데에 비해, 삿포로의 온화한 창공

아래에 있는 자신에게 강하게 무언가 치밀어 오름을 느끼고 있었다.

이 광주 연대 운동의 양상은 20년 전의 자료에도 있으나, 연대 집회에서 내가 광주 항쟁에 대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호소한 것은, 생각지도 않게 흘러나온 눈물과 함께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계엄군의 만행에 대한 분노, 광주 시민의 참상에 대한 동정과 항쟁에 대한 감명, 그리고 금후의 전개에 대한 불안 등, 광주항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대오에 서서 나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이라는 것을 느낀 것은, 조선근대사에 있어서 갑오농민전쟁의 존재를 알았을 때, 그리고 광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두 번이었다. 그러면 왜 그러했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제일동포가 놓여 있던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제일 동포가 놓여있던 상황 - 일본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

제일 한국인의 형성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서도 소상히 살펴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생활 또는 강제연행으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정착에 이른 것을 말한다. 그 식민지 지배 하에 있어서 주재 한국인은 일본 사회의 맨 밑바닥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지나치도록 가혹한 압제와 차별을 강요당해 왔다.

완수되지 않은 제일 동포에 대한 전후저리

일본의 패전 그리고 조선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에 따라 제일 동포의 상은 본래라면 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제일 동포에 대해 구 식민지 민중으로서의 적절한 보상이나 처우를 하지 않고, 오히려 1952년 독립과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일본 사회의 제도적 권리로 부터 배제시켰다. 이것은 구미의 구 종주국이 구 식민지 민중에게 내국민 대우를 하고, 일본과 같은 길을 걸었던 독일이 패전 후 병합했던 오스트리아인에 대해 상응하는 전후 처리를 한 것에 비하면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그것은 일본이 패전의 원인이었던 아시아 침략을 진지하게 반성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아시아 민족에 대한 전쟁 책임은 소홀히 되었고, 적절한 전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패전으로부터 50년대에 걸쳐, 일본사회는 혼란과 그 속에서 재건이 이루어지는 시대였다. 그 때문에 일본 정부는 그 때의 냉전 격화 - 6.25전쟁 발생이라고 하는 정세와도 연결시켜 전쟁 전부터 치안의 대상이었던 제일 동포에 대해 다시 관리, 억압하는 2대 규제법, 「출입국관리령」과 「외국인등록법」을 조속히 성립시켰다. 이처럼 일본인 보다 심한 혹독한 사회 환경 속에서, 제일동포는 생계

기반의 확립, 생활권 보호 등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패전직후의 시대 상황 속에서, 재일 동포 문제는 일본의 사회 문제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6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동포부제의 한일 조약 「법적지위」, 김희로(金嬉老)사건의 자리매김 이란

60년대에 들어 일본은 6.25전쟁의 경제특수에 의해 전후 수준의 경제 회복을 이루고, 그 후 고도 경제성장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어서 일본 자본은 아시아에 침범하고, 일본 정부는 쌀 전략으로의 종속을 유도하는데, 이를 배경으로 1965년에 일본은 한국과 국교 회복, 한일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조약의 내용은 동아시아의 냉전에 있어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었던 한국과 일본을 결합하는 극동 반공체제의 강화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목적이어야 마땅했던 조선과 일본의 역사청산, 양 민족의 화해는 등한시되었으며, 그것은 재일동포에 대한 「법적 지위 협정」에도 반영되었다. 이 법적 지위라는 것은 재일동포 중 「韓國籍」인 사람에게만 겨우 형식적인 「협정영주」 권을 주고, 사회적 권리를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일본에게 같은 역사적 책임을 묻는 「韓朝國籍」(북한) 사람의 처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자, 재일 동포 사회는 새로운 분열과 차별을 맞게 되었다. 그 결과, 당시의 동포사회에서는 「韓朝國籍」(북한)이 「韓國籍」을 수적으로 상회하였으나, 협정 영주권의 취득 운동이 전개되어 수적 비율은 역전되었다. 결국 한일 조약은 韓國籍자에게 사소한 이익을 부여하고, 재일 동포 사회의 반공 체제 강화, 일본 위정자에 대한 재일 동포의 분단 지배 강화를 꾀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오랜 세월 차별 받아왔던 재일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전후 처음으로 처우 확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초 이 법적 지위 협정에 기대를 걸었으나, 그 교섭의 경위, 성과 내용이 밝혀지자 강한 실망과 비판이 일어났으며, 재일 동포 사회에 한일조약 반대 투쟁, 「법적 지위 요구 관철 운동」이 일어났다. 그 조약의 성립을 통해서 재일 동포는 일본의 여전히 변하지 않은 차별, 배척 의식을 확인하고, 조약체결에 의해 일본자본의 유입만 서두를 뿐, 재일 동포의 권익보호는 등한시 하는 한국 박정권의 기민화(棄民化) 정책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 후 재일 동포가 주체적으로 차별 철폐 운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재일 동포의 권익 의식이 높아져 가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것이, 1968년 김희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야말로 전후 재일 문제를 일본사회에 묻는 효시

였다. 작년 9월, 김씨는 31년간의 옥중생활을 마치고 출옥하여, 그대로 한국에 귀국했다. 이 김씨에 대하여 「민족의 영웅」 또는 반대로 「단순한 범죄자」라고 하는 센세이셔널한 평가만큼 화제가 되었으나, 나는 재일 동포 문제로 자리 매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씨는 살인사건을 일으킨 후, 온천여관에 인질을 잡고 틀어박혀, 그때까지 자신이나 재일 동포에 대한 민족차별을 호소했다. 그 호소 방법은 물론 잘못되었으나, 그의 외침은 재일 동포에게 공통적인 시각이었고, 당시 막 성인이 된 나에게도 아플만큼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김씨의 사건과 호소는, 재일 동포나 일본의 문화인에게 큰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일본의 일반국민에게는 인질범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인질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으나, 지식인층에서는 재일 동포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개별적 차별 철폐운동의 발생

70년대를 목전에 두고 일본은 GNP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되어, 그 급격한 경제적 성장 노선은 여러 가지 부조리를 낳아, 일본 국내에서는 학생과 시민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 반전운동은 크게 고조되었는데, 그것은 일본 사회에 일본과 아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일본의 가해자성을 일깨우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 한국에서는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민주화투쟁이 고조되어, 일본에서도 재일 동포의 한국민주화 운동, 일본인에 의한 연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일 연대운동은 전후의 양 민중관계를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때까지의 일본-한국간의 관계는 거의 지배층끼리의 유착이며, 일본-북한간은 정당, 노동, 문화인이 중심이었지만 처음으로 시민 수준의 연대가 탄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 국내의 민중운동의 고조, 한국문제에 대한 관심의 확대를 배경으로 재일 동포의 차별철폐운동은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일본정부의 억압 정세에 대한 권익옹호운동에서 일본사회의 제도적 차별에 대항한 개별적 차별 철폐에 대한 도전이었다. 일본의 거대한 대기업인 히타치(日立)의 취직채용 차별, 전전공사(電電公社, 현 NTT) 수험거부 차별, 국민연금 지급 차별, 사법수습생 채용 차별 등의 철폐운동이 그것이다. 이들의 개별적 차별철폐운동은 일본인의 지원도 얻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일본사회에 재일 동포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넓혀, 차별에 고뇌하는 동포를 격려했다.

국제적 압력에 의한 제도적 차별의 개선과 그 문제성

80년대, 일본이 세계에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국제화가 요구되어, 일본 정부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게 되었다. 1979년 일본은, 이듬해 발효한 국제인권규약에도 개의치 않고, 가입을 꺼리고 이GEjs 것을 UN등으로부터 비난받아 동(同) 규약에 가입하고, 81년에는 베트남점 종결로 발생한 베트남 난민 수용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구미로부터 비판받아, 난민조약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들 국제조약 가입에 따라, 일본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의 정비, 개정을 부득이하게 단행하여, 재일 동포의 제도적 차별은 크게 개선되었다. 즉 공공주택으로의 입거(入居), 아동 제(諸)수당의 지급, 국민연금의 부분적 적용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난민의 수용에 의한 출입국관리령의 개정으로 재일 동포의 법적 지위도 개선되었다. 그것은 일한조약의 법적 지위협정에서는 제외되었던 조선(북한) 국적자에게도 협정여주와 동등한 '특별영주'라는 자격이 주어졌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 새로이 「외국인 임용법」 성립되어, 일본의 국공립 대학교원에 동포 채용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개별적 차별 철폐운동도 70년대에 계속되어, 번리사 인가 차별, 우편직원 수렴 거부 차별, 학교 교원 채용 차별, 지방자치제 직원 수렴 거부 차별, 민간주택 입거 거부 차별 등에 대해 확대되었다.

이러한 차별 철폐운동의 정점이 되었던 것은 1980년부터의 지문 날인 철폐(외국인 등록법 개정)운동이었다. 외국인 등록법에서는 일년 이상 주재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시 지문 날인을 필요케 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 지문 날인 의무 등은 일본 정부가 재일 동포를 치안 대상시 하여, 일상적으로 관리하디 위함이며, 재일 동포들에게는 오랫동안 울분의 대상이었다. 나의 최초 지문 날인은 14세 때였는데, 삿포로 시청의 한 구석에서 누군가에게 눈에 띄지 않을까 주위를 신경 쓰며, 비참한 기분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80년대 재일 한국인 한사람의 지문 날인 거부 뉴스가 보도되자, 「지문 날인 거부」라는 행위가 차별에 대한 항의의 상징으로 재일 동포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자, 눈 깜짝할 사이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지문 날인이 지난 범죄자 취급이라는 이미지, 재일 동포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자 일본사회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운동의 지원을 받아, 지문 날인 철폐운동은 크게 고양되어 일본의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85년 외국인등록 확인 신팅의 해, 약 만 명의 지문 날인 거부 보류자가 속출하였고, 이것은 일본 치안 당국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치안 대상의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이 공공연하게 형법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본인의 성씨와 이름, 소재지까지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론을 꺼려 단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지문 날인 제도는 개정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80년대는, 재일 동포의 제도적 차별의 개선에서 크게 전진한 시대이지만, 그 개선된 방식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일본이 국제여론에 눌려,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이른바 외압의 결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즉 일본 정부가 역사적 청산의 증거로서, 또 금후의 다민족 공생의 실현을 위해, 주체적 적극적으로 재일 동포의 처우 개선을 도모했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남아있는 재일 동포에 대한 차별

90년대에는, 1991년에 한국과 일본의 협의에 의해, 현안이었던 재일 동포의 법적 지위문제가 한 차례 결착(決着)을 보았다. 실은 한일 조약의 법적 지위 협정에 따른 협정 영주자격은, 대개 「자격취득자의 손자 이후의 재류자격은 미정(영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중요한 문제점이 남아 있어, 91년까지는 양 정부가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이 협의에 의해, 이듬해 협정 영주자의 자손 세대까지 영주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이것에 연동(連動)하여, 전술한 특례 영주자의 자손 세대까지 영주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같이 하는 사람은 모두 일괄하여 새롭게 「특별 영주 자격자」가 된 것이다. 본래대로라면, 일본의 역사적 청산에 관련된 이 사람들에게는 전후 즉각 포괄적인 영주자격을 부여했어야 하지만, 반세기를 목전에 두고 드디어 그것이 실현되었다. 거기에 이 협의에 의해, 영주자격자에 한해, 외국인의 지문날인도 폐지되었다. 이렇게 전후 50년에 걸쳐서, 재일 동포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회 보장의 안전 적용, 전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자체 직원과 학교교원예의 채용, 민족 다문화 교육의 보증, 지배 관리제도의 철폐 등,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차별문제는 남아 있었다.

한편 재일 동포의 차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차별조항(국적에서 제외)이 명시되어 있는 법제도상의 차별을 중심으로 서술해 왔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다. 일본사회 깊숙한 곳에, 민중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한국과 조선(북한)인에 대한 배외(排外), 멸시 의식, 말하자면 「민족차별」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일본이 근대에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조선을 침략, 식민지 지배해 온 과정에서 생긴 우월과 모멸의식이 축적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제도적 차별과 비교해 보기 어렵고,

그래서 무언가의 계기에 의해 분출되어, 때때로 격한 폭력이나 박해를 수반한다고 하는 성가신 것이다. 전쟁 전에는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대 학살이 대표적인 것이며, 전후에는 패전 직후의 재일민족 단체에의 폭력적 단속, 60년대에는 한일 조약 체결 교섭등을 배경으로 민족학교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이 빈발했다. 그리고 최근에도 80년대부터 공화국에 대한 배외적(排外的) 기운에 의해, 어떠한 관계도 없는 조선 학교 아이들이 폭력적 박해를 받고 있다. 그것도 여성이나 연소자 등, 약자를 겨냥한 비열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떠한 적절한 인권 옹호 정책도 취하지 않고, 일본 사회 민중의 대응과 지원도 한심스러울 정도로 빈약하다. 구미에서 일어난 민족 차별 사건의 경우, 해당 정부의 엄중한 조치, 민중의 활발한 항의 행동과 비교해 보면, 실로 대조적이지 아닌가.

전후 일본은 전쟁 전에 비해, 최소한 겉으로는 한국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주창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때까지 만들어진 차별의식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오지도 않고 있다. 또한 일본은 근현대에 거쳐 일관되게 구미를 본보기로 하여 「물질문명 발달도」라는 가치기분에 사로잡혀, 그 결과 아시아를 경시해왔다. 차별의식 해소에는 이러한 일본의 실정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젊은 세대는 구세대보다 편견이 적다고 하지만, 구세대에서 내려온 차별의식의 낙인, 사회정세의 우경화 경향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의식적 차별의 해소에는 일본 정부의 신속한 인권계발, 옹호정책 실시, 일본사회의 다문화, 다민족 공동사회로의 전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후 민족 민중의 의식과 공동사회 추구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재일 동포가 놓여진 상황을, 차별 상황을 중심으로 기술해 왔지만, 그것은 일본에서 동포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것에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차별이 재일 동포의 인간 형성, 의식에의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를 생각해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일본의 차별성은 재일 동포의, 특히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2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민족적 소외감을 부여한 것이다. 나도 그러했다.

70년대의 재일 동포 정세와 나의 민족운동

1928년 경상북도 시골 농가의 장남이었던 나의 아버지는, 일가의 생계를 돕기 위해, 그리고 젊은이에게 넘치는 청운의 꿈을 안고, 식민지 보국 일본에 건너왔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 출신자에게 가능한 직업은 한정되어 있어, 나의 아버지

는 토목 노동에 종사하고, 이윽고 홋카이도에 건너왔다. 그 아버지 뒤를 쫓아 1939년 나의 어머니는 조선에서 태어난 어린 누이를 데리고 홋카이도로 왔다. 그리하여 일본이 패전한 다음해인 1946년 나는 삿포로에서 재일 2세로 태어났다.

재일2세로서의 나 - 민족적 소외의 고뇌

내가 철이 들 무렵에는 내 자신이 주위와는 다른 존재, 다시 말해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 듯 하다」고는 알아차렸지만, 일본 학교에 다닐 때가 되니 그것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내가 일본의 초등학교에 들어가 조금씩 사물에 대해 눈뜨게 되면서부터 조선인으로서의 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조선은 뒤쳐져 있다. 조선인은 뒤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리고 단순한 생각으로 먼저 싹튼 것이 조선에의 혐오감이었다. 패전 후의 학교 교육은 일반적인 인권이나 국제친선을 설명하는 것은 있어도 조선에 대한 모멸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혐오감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나의 주변,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내던지는 뿌리깊고 노골적인 차별성, 그것이 각인된 아이들 - 내 친구들이 보이는 차별성, 그런 것들이 어린 나에게 「조선에 대한 비뚤어진 감정」을 갖게 했다. 이러한 지역상황은 당시의 일본사회의 반영이고 축도였다. 그러한 사회로의 대항력을 인격형성기에 주는 것이 학교교육이지만, 그것이 물질문명의 발전이라는 단일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일본을 위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교육이라면 그것은 기대할 것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가정에서 주고받는 조선어, 조선의 풍습, 아버지의 조선 친구들, 한국의 친척들로부터의 소식이나 편지 등, 조선에 관련된 전부를 혐오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이나 조선인에 대한 혐오감은 내 자신에게도 향해 있었다. 조선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열등감인 것이다. 학교에서 「조(朝)」자, 그것도 「초」라고 발음할 것 같으면 나는 가슴이 고동치고, 얼굴이 상기되고, 비굴하게 위축되어 가는 아이가 되었다. 밖에서는 나의 일가가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히 나의 친구들에게는 내가 조선인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않게 그저 숨기기만 했다. 내가 성장함에 따라 조선인이라는 소외감은 자기소외, 자기부정으로 발전했다.

「내가 조선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싫다」라는 자기혐오가 나를 지배했다. 「왜 내가 조선인으로 태어났을까. 조선인인가. 조선인이 아니면 안되는 건가」답이 나오지 않는 근원적인 물음이 나를 얽매이게 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없던 일로 할 수 없을까?」 등의 몽상까지 하게 되었다. 나는 완전히 자기 소외에 빠져버린 것이다. 또 나는 「내가 조선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내 자신이 비겁하다」고 느끼고 추악하다고 생각했다. 조선인이면서 조선인이

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신, 그러한 자신을 부정하는 나, 나는 대체 누구일까? 내 자신의 모습이 정해지지 않고 자기 분열도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하고 자기부정에도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러한 괴로움은 내가 민족운동에 참가하기까지 계속되었다.

이같은 체험은 나 개인만의 것이 아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일 2세 이후의 동포에게 공통하는 것이었다. 후일, 내가 민족운동으로 만난 청년들과의 교류로도 또, 재일동포들이 저술한 것으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재일 2세 이후의 동포는 일본사회의 차별성에 의해 민족적으로 소외되어 자기의 정체성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격에 있어서도 자기소외, 자기부정에 빠져 괴로워하는 경험을 한다. 그 결과, 자살로 매듭짓는 사람, 더 비극적인 것은 자신을 조선인으로 낳았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하는 아이와 쓸쓸한 슬픔에 방황하는 부모간에 말다툼이 생기고 살인사건까지 일어났던 것이다.

그렇다면 재일 동포 청년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는 것일까? 개인이나 가정내의 노력은 기본이고 또한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오사카 등의 동포 밀집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힘도 크지만 그것은 극히 적고, 공화국(북한)계 민족학교는 전국적으로 소재하고 있지만 한국계 동포는 자제의 취학을 꺼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에서는 민족학교 졸업은 정규학교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본에서의 진학이나 취업이 현저하게 제한받는다는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포자제의 취학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중에 재일 동포의 민족조직, 민족운동으로의 참가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다. 나의 경우가 그랬다.

민족운동으로의 참가, 「입관법」 개악 반대 운동

나는 30대 중반에 한국이나 재일 동포에 접해 보자고 생각해서 본거지의 민족단체, 재일본 대한민국거류민단 훗카이도 본부에 드나들고, 1971년 그 산하단체인 한청 훗카이도 본부에 참가했다. 이 당시, 재일동포에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본정부의 「입관법」 개악책동이였다. 그때까지 일본은 동포의 재류를 「출입국관리령」이라는 법률로 규제하고 있었으나, 69년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를 의도하는 조항을 신설한 개악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그것은 분명히 한일조약을 둘러싼 재일 동포의 반대, 법적 지위 요구운동을 짓밟는 책동이였다. 그리고 재일 동포에게는 생존권을 위한 행동도 「정치활동」으로 묶이는 것을 의미했다. 그 때문에 많은 재일 동포가 일어나서 일본의 민족세력을 끌어들이거나 같은 입장에 있는 재일 중국인과 공동투쟁을 하면서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이 개악법안을 폐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그 후 73년까지 집요하게 개악법안의 입법화를 모모하고 있었으나 맹렬한 반대를 받아들여 단념하게 되었다. 이 입관법 개악 반대운동을 통해 재일 동포는 자신들이 일본 정부에 의해 얼마나 위치 지워져 왔는가, 치안대상으로 돼 있는가를 느끼게 됐고, 게다가 나는 일본사회의 차별성에 의한 괴로움을 스스로 내향시키는 것이 아닌, 그것을 낳은 차별구조의 해소야말로 맞서 싸워야 할 것임을 깨달았다. 또 반대운동에 결집한 동포는 한일조약도 포함해 재일 동포의 권익옹호에 냉담한 박정권을 보고, 본국정권의 성격이 자신들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즈 후 재일 한국인이 한국민주화 운동을 일으키는 밑바탕이 되었다.

「민단민주화」 운동에서 한국민주화 운동으로

이러한 시대와 겹쳐, 70년대의 한국정세, 한국민주화 운동의 물결은 재일 동포사회에도 밀려들었다. 그 선구자가 된 것은 1971년의 「민단민주화」 문제였다. 그때까지도 박정권은 재일 한국인의 자치단체인 민단을 어용조직이라고 하여 간섭해왔으나, 독재체제의 강화와 함께 그 책동은 격화되었다. 71년 민단 중앙본부의 단장선거에 한국재일공관(韓國在日公館)의 정보권력은 노골적인 개입을 행해, 쉽게 다름만한 단장을 선출시켰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청(韓靑) 등의 산하단체의 배제, 민단민주화세력의 제명처분을 강행했다. 이 사건의 밑바닥에는 민단 창립 이후부터 존재한 친일적, 권력추종세력과 민족적, 자주세력과의 대립이 있었으며, 그 후 한천(韓靑) 등 민단 민주세력은 이 사건의 배경인 박정권과 정면으로 대치하게 되었다.

「남북공동성명」 지지 집회 - 남북동포의 첫 협상

다음으로 재일 동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이, 1972년 남북공동성명이다. 조국분단 후, 남북 양쪽 정부에 의한 첫 통일 준비는 재일 동포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박 정권은, 박 정권 이외의 사람들이 통일사업에 참여하는 일을 금지하고 억압했다. 그러한 박 정권의 자세에 대해 한천(韓靑), 東京民團 등은 남북 동포가 공존하는 「재일(在日)」에서야 말로 통일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在日の 38도선을 없애버리자」를 표어로 공화국(북한)계 민족조직 「조총련」, 그 청년조직 「조청(朝靑)」과 공동성명지지 집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특히 韓靑과 朝靑의 중앙본부 공동집회는 양쪽의 예상을 넘는 청년들이 결집해서, 새삼 재일 동포들의 조국분단의 아픔, 조국통일 염원의 중대함을 실감케 했다. 이 공동집회는 앞으로 韓靑이 조국통일운동에 관계되어 가는 출발

점이 된 것이다.

김대중씨 납치사건 발생과 「박정권 타도」로

그리고, 在日の 한국민주화운동을 고양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 1973년 KCIA의 現 대통령, 김대중씨 납치사건이다. 72년 10월 유신체제에 의해 독재를 단행한 박 정권에 대해, 한국민주화 세력의 기수였던 김대중씨와 韓靑을 포함한 民團 민주세력은 해외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합의하고, 그 거점으로 서 한국 민주화 통일촉진 국민회의를 결성하여 「박 독재정권 타도」를 선언하고자 했던 바로 그 직전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가 韓靑 北海道에 참가했을 즈음, 이 조직은 휴면상태였고, 나는 구 간부를 방문해 청년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민단체 조직에 근무하는 청년을 모아 정례회를 열어, 민족허무주의적 경향에 빠져있어 나 역시 허무감을 느낄 뿐이었다. 그 중 입관법 문제, 민단민주화문제에 의해 韓靑 전국조직과의 교류가 시작되고, 급진적인 지향성을 가진 학생들도 참가해 조직은 활성화되어 갔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韓靑 北海道도 韓靑 中央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나도 중앙 청년들이 민족운동에 진지하게 달려드는 모습, 청년다운 자세에 매우 끌리는 점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과의 동일한 행동은 이미 어용화되어 있는 民團 北海道와의 충돌을 부르고, 그렇지 않아도 적은 그 지방 청년들의 결집을 곤란하게 했으므로, 조직운영의 중심이었던 나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윽고 韓靑 중앙 산하단체 배제에서 御用 청년조직 신설로 사태는 진행되고, 民團 北海道는 우리들에게 조직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나는 지금까지의 民團 民主化 문제에 있어 권력추종세력의 불리함, 民團 北海道의 물민족적인 자세에 분노와 실망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회로 72년 겨울 동조자들과 함께 민단조직을 나와 민족운동을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앞으로 민족운동을 어떻게 전개할지, 그 지방청년들을 어떻게 규합할지, 방향과 고민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김대중씨 납치사건이 발생했다. 나는 김씨의 강연을 韓靑의 동기(冬期) 강습회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주장은 대부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민주적인 것이었다. 그러한 사람들 모살(謀殺)해서까지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박정권이란 존재가치가 있는가 하고 의문을 느꼈다. 나는 71년에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한 이래,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민족의식 진전과 함께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박 정권의 독재정치

조차, 「한국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하고 생각하려 했으나, 그 낙관적인 기분은 완전히 사라져 갔다.

이리하여 나는 在日の 한국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박 독재정권 타도!」를 결의했다. 게다가 나는 지금까지의 나의 청년운동 자세를 정리했다. 「조국정세를 전면으로 내세우지않고, 제일 동포의 친목교류에 힘썼다고 해서 생각한대로 청년들이 모이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도 제일 동포 청년들의 고민은 민족성에 있으므로 그 근원인 조국과의 관계는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조국의 부조리한 정치구조가 만연하고, 동포민중이 고생하고 있는 정세를 묵인해야 하는 것일까? 앞으로의 내 한국민주화 운동에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것은 그 때 대처하면 된다」 하고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그 후,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한국 민주화 운동을 해쳐나갔다.

갑오농민전쟁 - 내가 획득한 「민족의 긍지」

또 나의 민족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추억이 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조선근대사에 있어 갑오농민전쟁을 안 것이다. 갑오농민전쟁에 대해서는 일본교과서에도 「동학당의 난」으로 나와있고, 나도 완전히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상세한 내용,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거의 몰랐었다. 현재와 다른 한국민주화 문제가 활성화되려고 했던 70년대 초반은, 한국과 조선관계 서적은 적었지만 그것으로부터 나는 조선근대사와 갑오농민전쟁을 배웠다. 그 책을 읽을 때, 마침 나는 「눈이 번쩍 트인다」는 생각을 했다. 할 수 없이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어렸을 적에 배어든 민족적 열등감 「조선은 뒤쳐져 있다. 한심한 조선인」이라는 의식은 다 씻어버리지 못하고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은 일본에 의한 조선 식민지 지배의 역사, 「왜 조선은 일본에게 지배당해 버렸는가」 하는 분노, 원통함, 의문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던 것이 근대사에서 갑오농민전쟁을 알게 됨에 따라서 나의 조선, 조선관은 180도 변했다.

「조선 민중은 결코 쉽게 일본에 지배당한 것이 아니다.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조선 독자의 근대화로의 태동이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일본이라는 외세의 갑습이 없었다면, 조선 민중은 갑오농민전쟁으로 봉건체제를 타도했을 것이다. 일본의 근대화인 明治維新이 하급무사라 하더라도 지배계급에 의한 것이었음에 비해, 조선의 갑오농민전쟁은 민중이라는 피지배계급에 의한 보다 진보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조선의 갑오농민전쟁은 패배했으나, 거기에 나타난 민중역량은 그 후, 항일 투쟁으로 이어진다」 라고. 이처럼 갑오농민전쟁이 이루어 낸 역할, 그것을 지

지한 민중의 숭고한 투쟁과 희생, 근대사에서 갑오농민전쟁의 의의를 이해했을 때, 「그 때 나는 이 민중의 후예였던가」하고 나는 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데 비로소 긍지를 느꼈다.

획기적인 한일연대운동의 등장

이윽고 일본에 있어서, 획기적인 민중운동이 생겨났다. 일본인의 한일연대운동의 탄생이었다. 베트남 반전운동에 의해 일본-아시아 관계를 생각하기 시작한 일본 사회 민중은 때마침 베트남전 종결의 조짐, 빈번한 한국민주화 운동과 박 정권 탄압의 보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대중씨 납치사건에 의해, 한국정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게다가 이 충격적인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한일 양 권력의 추악한 유착과 부패가 드러나, 일본 민중에게 있어 한국문제는 「한일문제」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깊어져 갔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한일문제에 매달리는 일본 민중운동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삿포로에서는 김씨 납치사건 직전, 홋카이도대학 조수인 재일 한국인 정치범 사건이 일어나, 그 지역 문제로서 구원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74년에는 시민운동에 의한 한국의 정치범 석방 서명운동도 일어나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운동에 관계된 일본시민, 학생과 의논을 거듭하여, 삿포로에서도 한일 연대운동 조직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리고 韓靑 北海道와 이 일본인 친구들과의 연대운동은 75년 봄 동아일보 지원 집회를 시초로 시작되고, 같은 해 여름 김지하의 희곡 「鎭惡鬼」 공연, 그리고 76년 겨울 재일 한국인 정치범 구원영화 「告發」 상영으로 이어졌다.

民團으로부터의 제명(除名) - 나의 민족환상에서 벗어남

이 「진오귀(鎭惡鬼)」 공연운동 과정에서, 나의 민족의식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은 민단 북해도가 내 제명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민단 동포에게 우송된 통지문을 보고, 나는 「내 민족운동에 대한 훈장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슬픈생각이 들었다. 나는 민족조직에 참가할 때부터, 동포로서의 민족적 일체성을 소중히 생각하고, 민단 북해도의 각종 행사에서 동포의 장례식과 제사까지 솔선해서 힘을 쏟았다. 이러한 동포의 신뢰관계는, 나와 민족사회에서 배양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입장을 달리해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민단 간부는 돌아보지도 않고 나를 북해도의 한국인 동포사회에서 추방했던 것이다. 이 경험은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민족심, 동포의식의 험거움을 나타내는데 지나지 않지만, 나의 민족의식의 성장에 있어서는 귀중한 것이 되었다. 그것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떠한 가치관을 공유하

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민족의식이 빠지기 쉬운 환상에 대한 쓰디쓴 반성이었다.

일한연대운동의 의의와 나의 「일본인관」의 변화

그리고 76년에는, 韓靑이 제기한 한국 정치범 석방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운동이 자극이 되어 한일연대운동은 일본의 각계각층에 퍼져, 하나의 사회운동이 되었다. 홋카이도에서도 삿포로 이외의 각지에서 일한연대운동이 일어나고, 70년대 후반에 주된 것으로 77년 한국민중문화의 페스티벌 「서울로의 길」 공연, 78년 이소선, 전태일모자의 전쟁영화 「어머니」 상영이 행해지고, 재일 한국인 정치범 지원운동에 대해서는 일관해서 계속 이루어졌다. 이 한일연대운동은 조선과 일본의 민중관계에서 실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는, 근대는 말할 것도 없이 현대에서도 냉전체제에 의해 분단된 조선 - 그것을 이용해 수익하는 일본 사이의 비뚤어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조선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친구여야 하는 일본의 민중 조류, 연대운동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 전에는 한일사회주의자의 공동투쟁은 있었어도, 그 주목적은 일본의 혁명이었고, 조선 식민지 해방은 그 결과로서 부수된 것이었다. 전후에는 한일의 공동투쟁과 연대운동은 곧바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사회주의 세계의 「국제연대」 명분을 충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경위에서 70년대에 등장한 일한연대운동은 일한 양 민중의 역사적 화해를 주된 관점으로 침착하게 되었다.

이 한일연대운동은 특히, 韓靑 北海道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큰 격려가 되었다. 우리들이 한국민주화운동을 시작해서 바로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그것은 이 운동을 떠받치는 민족주체 역량의 결핍이었다. 그 고장의 청년들은 모이지 않고 그때까지 운동을 담당해 온 학생들은 졸업해 떠나버렸고, 그 다음으로 조직한 학생들도 이윽고 졸업해 떠나버렸다. 이러한 만성적인 운동역량의 열악함에, 일본의 친구들은 한국민주세력이나 정치범의 구원, 박 정권을 지지하는 일본에 대한 규탄이라는 연대운동으로 지원해 준 것이다.

이 일본인 친구들과의 연대운동, 교류를 통해 나의 민족의식은 크게 변해갔다. 나의 그 때까지의 「일본인관」이 바뀐 것이다. 나는 재일 한국인으로서의 관점에서 일본의 상황을 심하게 비판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일본을, 좀처럼 변혁시키지 않는 일본민중에게도 불만이 있었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대운동에서, 일본이란 나라에 속한 자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를

바꾸고 싶어하는 일본의 친구들과 접하면서, 나는 그 때까지와는 다른 일본 민중의 존재를 실감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일본인관의 변화는 나에게 민족의식에 잠긴 배외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나의 소박했던 민족의식은 같은 민족에게 가졌던 민족환상으로부터의 탈각, 거기에 더해 일본인에 대한 상투적인 배타의식의 극복을 거쳐, 좁은 민족주의 틀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사회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인간의 연대」라는 사고를 익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는 70년대의 민족운동을 통한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여 자기소외를 극복해 왔으나, 그 중심에 있던 것은 조국정세였다. 이 시대, 민족운동에 관계한 재일동포와 청년은, 나와 공통된 체험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재일 동포에게도 조국정세는 큰 관심을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70년대의 재일 동포정세 속에서 재일 한국인은 1980년 광주항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광주항쟁 - 재일 한국인에게 가져온 의의

광주항쟁에 대한 재일동포의 의식동향을 나타내는 조사 데이터는 내가 아는 한 유감이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거기에서 당시 한청(韓靑)이 행한 광주연대의전국 캐러밴(caravan)행동으로 보이는 재일 동포의 의식상황에 대해 소개해보자. 광주항쟁이 일어나자 마자 한청, 한민통 등은 3번의 중앙집회를 개최하고 특히 한청은 「광주학살 규탄, 군정타도, 재일한국인 행진단」을 결성하고 6월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중앙부가 히로시마부터 동경까지 역전, 동포밀집지역, 지역 집회에서 캐러밴(caravan) 정보선전을 행했다.

재일한국인의 의식동향 (한청의 전국 caravan 행동에서)

이 활동 종료 후, 참가자에 대한 좌담회가 한민통의 기관지 「민족시보」에 게재되었는데, 거기서부터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여 본다.

먼저 정권추종세력, 민단 간부의 대응이다.

A : 우리 행진단이 히메지(姫路)에 도착한 때, 그 날 유신민단의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무언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하고 생각한 결과, 전 단원을 동원해서 히메지에서 싸우자, 히메지에서 부술 수 없다면 아мага사키에서, 그리고 그것이 안되면 오사카에서 쳐부순다고 하는 지령을 내린 듯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히메지에서 2명, 아мага사키에서 3명밖에 동원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략) 덴노지(天王寺)에서 아침을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으나, 저녁 집회에는 유신민단, 청년회, 공안경찰, 우익등이 왔습니다. 유신민단의 간부가 공안경

찰이나 우익청년들과 태연하게 악수하는 것에는 놀랐습니다. (중략) 그 장소에 동원되어 온 민단원은 모두 일반의 민단원이 아니야.

B : 민단의 직원, 청년회 간부가 대부분으로, 그것도 아주 일부였지요. 오사카에도 당연히 「cuqntuu」 하는 지령은 들어왔을 터이지만, 동원할 수 없었고, 모두 거부하고 있었지요. 구체적으로 그들은 시내 한 가운데라든지 역 앞등의 장소에서 유신민단의 이름을 걸고, 행진단에 대해서 방해나 폭력을 행하는 일은 일반 민단원이나 일본 시민의 눈을 겁내서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의 재일 동포, 민단 동포의 반응입니다.

C : 히로시마에서는 비가 와서 모두 집안에 있었지만 그래도 창문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토에서는 한국학원의 학생들이 창문에서 손을 흔들어 주어서 감격했어요. 아мага사키에는 가전거로 달려와서 「빠라를 주세요」하는 동포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건네면 「안녕하십니까」하고 말을 하며 미소짓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좀처럼 체험할 수 없는 일이지요.

D : 마침 광주항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지부에서 호별방문을 하고 있으니, 어떤 동포는 「광주항쟁에는 관심이 있지만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그야말로 일본정부이고 유신민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중략)

그리고, 일본사회, 민중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E : 광주항쟁은 일본 사람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10일간의 행진속에서 많은 일본인들로부터 격려의 말이나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실감했습니다. 광주항쟁에 진짜 커다란 분노를 지니고 있었지요.

A : 구체적으로 히로시마에서는 차 속에서 운동자금을 주기도 하고, 오카야마에서는 유신민단의 방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폭력반대」라고 운동자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후쿠야마시였던가, 택시 운전사가 와서 빠라를 달라기에 한 장을 주니까 더 주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묻자 「동료에게 나눠 줄 것입니다」라고 해서 기뻐했습니다. 또 노동조합 사람들도 와서, 빠라를 많이 건네 준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일본사람들은 「전두환이 나쁘고 광주시민, 학생이 옳다」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것은 강한 실감으로 느꼈지요.

여기서 재일 한국인의 대응, 의식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먼저 민단의 일부 정권추종세력만이 광주연대 활동에 방해행동을 하고

광주항쟁에 대해서 적대 의식을 갖고 있었다. 같은 민단내의 중심세력, 간부도 많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방해행동에 참가하지 않고 적어도 광주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민족적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다음으로 그 이외의 일반 민단 동포, 재일 동포는 광주항쟁이나 희생자에 대한 공감, 군분에의 분노를 느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재일 동포의 의식상황은 홋카이도에서도 같았고, 전국에서도 같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박대통령 사살 사건이 후 한국 동포가 계속적으로 주목되어 왔는데, 광주항쟁이 시작되자마자 그 상황은 매스컴에 의해 크게 보도되었다. 또 일본인 체재자의 광주학살 목격담, 광주항쟁에서의 보고와 그 참상도 전해져, 재일동포는 광주항쟁에 대해 제법 정보를 얻고 있었다. 특히 TV, 사진으로 보여진 광주시민 학살, 비인간적인 취급은 한국정부 군부가 아무리 말을 바로잡아도 그 부당성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것들을 총괄해서 보면, 광주항쟁에 대한 재일 한국인의 의식은 극히 일부의 정권추종세력을 없애는데 공감하고, 특히 희생자에게는 강한 동정을 군부에는 비판이나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의식의 각성

이러한 의식상황을 근거로 해서 당시 광주연대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의 시점에서, 광주항쟁이 재일 한국인에게 주었던 의의에 대해 서술해보고 싶다. 우선 재일 한국인의 민족의식 각성이 되었던 것이다. 내가 활동하고 있던 한청에서는 「광주세대」라는 말이 생겼다. 이것은 광주항쟁에 따른 조국정세, 민족의식의 자각, 민족운동에 참가하고 있던 청년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밖에도 「4.19세대」, 「진오귀 세대」 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때마다 조국정세, 운동이 제일 한국인 청년의 민족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재일 한국인 청년이 민족운동에 참가하는데는 그 나름대로의 민족의식의 환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민족운동을 짊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말하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소외요인은 「생활에 있어서 조국과의 관계의 희박함」 - 재일 동포의 생활은 대부분 일본사회의 정세에 따라 규정되어, 조국으로부터의 영향이 적고, 또 「세대의 변화에 의한 민족의식의 희박화」 - 조국에서 온 1세대와 달리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2세대 이후, 3세대, 4세대로 변해감에 따라 자연적 민족의식은 감소해 가는 것이었다.

한편 커다란 촉진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차별이 가져오는 자기 만족성의

대상화」 - 내 경우가 그랬지만 차별은 자기에게 내재되어 있는 민족성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고, 그 개선이 진척되면 계속 작용하고, 또 「조국정세 보도량의 증대화」 - 재일 동포는 일본사회의 영향을 받는 탓에 거기에서의 조국정세의 활성화는 큰 자극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촉진요인인 전자는 역으로 자기의 민족성으로부터 도피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회정세에 따라 달라져 항시적인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 촉진요인은 시대적, 인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지만, 소외요인은 해외 거주민으로서 극히 자연적인 것이고 저항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곤란함 속에서 「광주세대라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만큼 민족운동의 활성화는 광주항쟁이 주었던 민족의식의 각성이 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와 같은 민족의식의 각성은 민족운동 참가자 뿐만 아니라 전술의 민족시보지(民族時報誌)에도 있듯이 다른 재일 한국인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다.

민간 간부층의 대부분이 행진단 방해의 조직지령을 내려보이면서 반드시 그것에 따르지 않았던 것은 무언의 저항이라도, 그 나름대로의 민족의식 각성의 발로일 것이다. 또 일반적인 민단동포, 재일동포가 행진단에 나타낸 지지, 호의적 자세도 민족의식 각성의 결과이다. 7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은 재일동포의 민족의식을 계속 자극해왔지만 광주항쟁 이것은 그 조류의 정점으로서 가장 큰 민족의식의 각성이 되었던 것이다. 군부에 의한 광주제압 이후, 한청, 한민통 등은 광주항쟁의 실상을 전하는 영화 「한국 1980년, 피의 항쟁의 기록」의 상영운동과 게다가 광주항쟁의 배후 조종자로서 처형될 것 같았던 김대중씨의 구명운동을 전력을 다해서 전개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광주항쟁에 의한 민족의식의 흥룡이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국가폭력성의 의식화

다음으로 국가폭력성을 의식화시킨 일일 것이다. 세계 여러 매스미디어는 재일 동포에게 광주의 참상을 남김없이 선명하게 전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군대가 가진 폭력의 무시무시함을 새기게 하고, 그 배후에 있는 국가의 존재를 느끼게 했던 것이었다. 물론 한국에 있어서 국가의 폭력성은 광주학살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조선 전쟁 전후의 민중학살사건, 수많은 정치범 사건, 그리고 처형, 광주항쟁 무렵에서는 정부기관 KCIA에 의한 김대중 납치사건(살해미수)이 전형적인 것들이고 한국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도 그런 것이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사회에스는 한국민주화 운동세력을 제외하면, 국가의 폭력성을 충분히 의식하

지 못했었다. 그것은 조국분단 정세를 배경으로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공산침략의 저지」나 그것에 더해 재일이라는 해외동포로서의 한계성도 있었다. 재일 한국인은 국외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행위를 직접 실감할 수 없고, 또 그 때문에 자국에 대한 깊은 생각도 있어 그것이 구가의 폭력성을 의식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그렇지만 광주의 경우는 달랐다. 계엄령에 의해 죽임을 당해 노상에 산란한 시민의 사체, 끔찍한 모습, 학살된 많은 시민의 관, 그것에 매달려서 통곡하는 가족, 계엄군이 무저항인 시민에게 가하는 폭행, 노예를 연상시키는 체포, 연행의 모습,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는 광경이 전개되는 것이다. 한국정부와 군부의 공산주의 선동이나 폭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상투구가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할 만큼 「강력한 군대에 의한 학살, 국군이어야 할 군대가 지켜야 할 자시 국민에게 가하는 만행, 그리고 희생자는 재일 동포와 마찬가지로 일반 민중」이라는 실태가 재일 동포에게 제시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재일 동포는 자국의 군대와 정부는 뭐냐는 의문을, 비판을 느끼고, 민중에 대한 아픔과 어우러져 자기의 민족의식을 각성시켜 그것이 전국행진단에 대한 긍정적 대응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것은 재일 동포에게 있어서 국가의 폭력성에 대한 의식화였다. 단지 유감스러운 것으로 재일 한국인사회는 광주의 고귀한 희생에 의해 의식화된 국가의 폭력성을, 재일사회의 한계성 혹은 그것을 초월한 정치의식의 불충분성에서 자신의 문제로 대상화시키지 못하고, 「광주학살 규탄, 전두환 군정의 책임추궁」에 까지 진행할 수 없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파헤쳐지고 있는 우방국 미국의 민중학살, 한국정부기관에 의한 가혹한 인권침해가 폭로되어감에 따라 의식화된 국가의 폭력성은 그것들과 연관되고 대상화되어, 재일 한국인 동포는 그 근원인 조국분단의 극복으로 향해가는 것은 아닐까.

일본사회의 한국 민중관 발전

마지막으로, 일본사회의 한국 민중관을 발전시킨 것에 대해 주목했으면 한다. 광주항쟁과 일본 사회의 관계성은 본고의 과제는 아니지만, 재일 한국인에게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술하겠다. 광주 항쟁 후,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문득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한일연대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운동체(運動體), 때로는 일반 일본인의 이야기속에서도, 한국민중을 접할 때 사실은 깊은 경의를 담은 적이 있다. 70년대의 한국민주화 운동이 일보에서 주목되기 시작하

고부터, 한국의 민주세력과 민중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사회의 일반 한국 민중관도 이전에 비해 변해간 것을 나는 피부로 실감하고 있었다. 단지 그 평가 속에는 형식주의적인 것, 동정심의 연장, 일본인으로서의 속죄감의 표출 등의 뉘앙스가 혼재하고 있기도 하고, 한국 민중이라 해도 그것은 대부분 민주세력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주항쟁 이후 한국민중에 대한 평가는 더욱 더 한 단계 향상된 것 처럼 느껴지고, 전술의 「경의」에도 외경이나 선망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으며, 한국민중이란 문자 그대로 민중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것은 어쩌면 광주항쟁을 본, 한국의 일반 민중이 군사력을 물리칠 정도의 투쟁을 전개하고, 그리고 정해진 틀 속에서이긴 했지만 해방구를 수립한 자치성을 발휘한 것으로, 일본 민중이 큰 충격과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사회는 전술한대로 여전히 재일 동포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성이 가로막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 사회의 한국 민중관의 발전은 재일 동포를 둘러싼 사회환경의 개선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한국민주화운동의 단상(斷想)

이종수(광주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

1. 유럽 내 동포사회의 형성

—파독 간호사와 광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유럽에 거주하는 동포의 수는 약 9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그중 1/3에 해당하는 3만 명 정도가 독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질적으로 동포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전후 경제부흥으로 인해 인력난에 시달리던 독일 정부와 인력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획에 따라 한국의 고급인력이 '산업연수생(Praktikant)' 이란 이름으로 파독, 각 병원과 양로원 그리고 지하 막장에서 외화벌이의 일군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1960년대 초부터 70년대 후반까지 독일에 건너간 간호사는 약 2만 명, 그리고 광원은 약 1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때 박정희 군부일당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후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추진시키고 있었다. 당시 한국정부의 외환보유고는 1억 달러도 채 되지 않았다. 이처럼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성사여부조차 불투명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하에서 박 정권은 파독 노동자들의 임금을 담보로 해 독일연방은행으로부터 4천만 달러의 차관을 끌어 올 수 있었다.

초기 독일로 건너온 간호사와 광원 중 일부는 계약을 마친 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각국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일부는 남·북미 등 각 대륙으로 이민을 떠났거나, 귀국을 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독일에 귀화해 살고 있다. 일부이

긴 하지만, 아직도 망명객 신분으로 현지에 머물고있는 사람들도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파독 1세대는 이미 고령화되었다. 그리고 1.5세 내지 2세대들은 현지 생활에 적응하며 동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이 탄생하며 교포들의 실수(實數)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물론, 이 전부터 유럽 각지에 유학생들의 왕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간혹 도서관에서 발견되는 학위논문들로 미뤄보아 이미 1920년대부터 한국유학생들의 진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수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데다, 지역의 특성상 공부를 마치면 귀국해야한다.

80년대 이후 국내 기업들의 유럽시장진출이 잦아지며 현지 주재원들과 그 가족들의 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또한 교포사회 형성에 일정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이민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교민들의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끈끈한 '정(情)' 으로 인해 적어도 그 수가 감소되는 것은 막을 것으로 사려된다.

2. '동백림사건' 의 진상

196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동백림사건! 이 사건은 아직도 그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궁에 빠져있다. 피해자들은 당시 상황을 당국이 "조작한" 사건이라 주장하고 있고, 사건을 담당했던 장본인들은 명백한 "범법행위" 라는데 한치의 양보도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사건의 진상은 무엇인가?

2-1. 동백림 사건; 조작인가, 반역인가!

'동백림 간첩단사건' 은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밝혀진 최대의 '간첩단사건' 이다. 그는 1967년 7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 여명의 재 유럽 한인들이 관련된 동백림거점 간첩단사건을 발표했다. 북한의 사주를 받고 동백림을 거점으로 활동해온 이들은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한 이적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재 유럽 유학생들이거나,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지식인들이라는데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 가운데는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씨 부부와 재불화가 이응로 화백 부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중 194명이 유럽 각지에서 '납치' 되어 한국으로 '강제연행' 되었다. 이

들 중 34명이 기소됐고, 19명만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 위해 또는 연구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거나, 아무런 거리낌없이 동백림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다.

대한민국 실정법의 자대로 볼 때 이들이 북한에 들어간 것은 “탈출”, 다시금 한국 땅을 밟게 되면 “잠입”, 금품 수수 시엔 “공작금수령” 죄에 해당한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과 ‘반공법’ 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국 내·외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동백림간첩단사건은 1970년 12월 이들 모두가 석방되며 일단락 되었다.

2-2.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이 발생한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이에 대한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사건 관련 당사자들 중 대부분은 하나 같이 “조작된 사건” 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이 사건을 집행한 장본인들은 이미 현직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해당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되었다” 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MBC 199.9.19,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동백림사건」 참조)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사건이 우연히 터진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동백림간첩단사건 발표 3일 후(1967.7.11) 공교롭게도 당국은 당시 서울대 합법적 학생서클이었던 「민족문제비교연구회(민비연)」 가 동백림간첩단과 연계, 정부전복 음모를 기도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의 지도교수로 있던 황성모 교수가 독일 유학시절 북한과 내통,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은 다르다; 당시 날로 강화되는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에 대해 공화당 정권은 긴장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탈출구 찾기에 고심했다. 4·19 이후 최대 위기에 몰린 박정희 정권은 대학가에 휴교령을 내릴 정도로 강경책으로 맞섰다. 여기서 타깃으로 삼은 것이 민비연 이었다. 이들은 사실상 6·3사태 이후 학생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후일 이 사건을 주도했던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도 그의 회고록에서 민비연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백림사건도 당시 궁지에 몰렸던 국내 정치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2-3. ‘납치’ 인가, ‘임의 동행’ 인가?

동백림사건은 유럽사회에 대한민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 시킨 중대한 사건

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유럽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 중의 하나였다. 한국의 ‘민속’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리고 1950~60년대 유럽에 건너간 학생들 대부분이 엄격한 반공교육을 받지 않았고, 또 이들 중 가족이나 친지들이 북한에 많이 살고 있었다. 당시 자유스럽게 장벽을 넘나들던 분단독일의 상황으로 미뤄보아 그들의 방북이 ‘범죄행위’ 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았다.

전후 북한의 경제성장은 괄목할만한 것으로 남한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유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적대감보다 오히려 ‘친근감’ 으로 다가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들의 동백림 소재 북한대사관 방문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일부는 방북길에 오르기도 했다. 동백림사건의 책임자격으로 알려진 윤이상 선생만 해도 강서대묘의 사신도를 보고 공부하기 위해 1963년 방북했다. 후일 그는 이러한 방북 행위로 인해 생과 사의 갈림길을 헤매게 될 줄 몰랐다고 술회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입장 또한 단호했다. 비록 외국인이라 해도 합법적으로 독일 내에 거주하는 자 모두는 독일법의 보호를 받게되어 있다. 1967년 6월 30일 독일 내 모든 언론매체에 일제히 보도된 “실종된 한국학생” 에 관한 기사가 독일사회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독일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범죄집단이 저지른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기관원들이 불법적으로 17명이나 되는 학생 및 노동자들을 독일땅에서 납치해간 것은 심각한 “주권침해” 라고 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독일 정부는 대통령 특사를 보내 한국 정부와 협상을 벌였고, 각 언론사는 앞을 다투어 특파원을 파견, 연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인권상황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들은 두 나라 사이의 인식(문화)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독일 측의 입장으로 볼 때 납치된 사람들의 행위가 “간첩죄”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그들의 민간차원의 교류가 남북화해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북접촉이야말로 얼어붙은 동토에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으로 명명되는 이들의 대동독정책(통일정책)은 한국정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띄고 있었다. 이들은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지양하고, 동·서 간 잦은 교류를 통한 내독문제를 접근하고 있었다. 1988년 독일연방정부가 윤이상 선생에게 「독일연방공화국 대공로대훈장」 을 수여한 것만으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업적 - 동서문화의 가교역할을 한 - 이 높히 평가된 것이다. 독일 역시 분단국으로서 동·서 냉전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나라였

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한국정부가 유럽 여러 나라들의 압력에 의해 사건관련자 모두를 그들이 있던 자리로 되돌려 보냈지만, 이 후 이어진 후유증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보상은 과연 이뤄질 것인가?

3. 유럽 내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조국통일운동

유럽 내에서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은 따로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이 또한 유럽에 사는 동포들의 신분적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 대부분이 80년대까지만 해도 체류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유럽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배경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필자는 국제회의에 갈 때마다 각 나라 - 일본, 미주, 유럽 등 - 에서 파견된 대표들의 캐릭터가 거주지역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 먼저 동포사회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유럽 민주화운동의 특징

유럽내의 민주화운동의 특징은 서로가 다양성을 인정하며, 하나가 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소속집단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즉, 이념적으로, 신분적으로 각기 다른 위치에 놓여있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념적으로나 조직이기주의로 인해 일정정도의 갈등도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잦은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유럽운동의 강점을 든다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미나'를 들 수 있다. 운동자체가 민주주의 이해와 인권의 존중, 나아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학습의 장이 되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처음엔 생존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다가 점점 의식화되며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그리고 통일운동에까지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국내·외적으로 연대활동을 전개하며 최근에 제3세계문제, 환경·평화문제 등 국제연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3-2. 민주사회건설협의회(민건회)

“「민주사회건설협의회」는 독재정치의 횡포와 탄압, 국민경제의 예속과 파탄, 서민대중의 착취와 빈곤을 초래한 박정희 정권의 비민주적·반사회적인 유신체제를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민주사회의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1974년 3월 1일 본의 윈스터 광장에서 열린 성토대회와 가두시위에 함께 참석했던 재독 한인 노동자, 유학생, 종교인, 지성인들이 발기하여 조직한 협의단체이다. 이 협의회는 독재체제의 철폐,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는 민주질서의 확립, 자립경제의 건설, 국민대중의 생존권 보장과 복지향상 그리고 조국의 자주적·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기본적 토대 위에서 공동적인 사고와 토론을 통해 민주사회의 이념과 그 실천방법을 모색하며, 국민대중의 민주의를 고취하고, 건설적인 사회참여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그 근본과제로 삼는다”(「민주사회건설협의회」 현장 전문)

현장 전문에서 밝혔듯이 민건회는 당시 엄혹한 유신치하에서 투쟁하는 한국민중들과 연대하기 위해 독일에서 결성된 유럽 최초의 민주화운동단체이다. 여기엔 노동자, 학생, 지식인 등이 총 망라되어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당시 독일 내 지식인, 종교단체, 진보적 정당 등과 연대해 유신정권의 반민주적 작태를 규탄하고, 이를 독일 사회에 알리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당하는 인권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데 힘썼다. 특히, 독일의 개신교가 한국의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민건회는 독일 내 뿐 아니라, 일본, 미국 등 민주단체들과도 연대해 공동 심포지엄 및 성토대회를 제네바, 빠리, 도쿄, 뉴욕, 워싱턴 등지에 개최한바 있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 쟁취된 6·29선언 이후 민건회의 해외 활동은 한계성에 부닥치게 되었다. 그래서 일부 회원들은 학위를 마치고 귀국했고, 나머지 회원들은 통일운동에 깊이 참여하는 등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민건회 초대 의장으로 송두울 교수가 추대되었다. 초기 민건회의 핵심참모들은 서울대 문리대 출신들이었다. 특히, 철학과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송두울, 이삼열, 강돈구, 박대원, 이창균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민건회에서 활동하던 일부 기독교인들이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를 만들어 후일 이들이 북한의 '기독자'들과 비엔나, 스톡홀름 등지에서 잦은 회의를 갖았고, 또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

독일 외 지역에서는 주로 망명한국인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단체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한국자주통일추진회」, 「자유동포협의회」, 「한국민족문제연구회」; 스위스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스웨덴 「민주수호협의회」, 덴마크 「민족문제협의회」 등이 있었다.

3-3. 노동운동

초기엔 노동자들도 모두 민건회에 참여했다. 그러나 특성상 광원들이 주축이된 노동자운동과 간호사들 중심의 여성운동단체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7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며 세계경제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독일의 불경기는 파독 광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수십 명씩 집단해고를 당해도 어느 누구에게 호소할 길이 없었다. 믿었던 한국대사관마저 기업주편에 서서 고압적 작태로 이들을 위협했다. 고분고분 시키는대로 말을 들으라는 것이다. 여기엔 기관원 프락치까지 끼어있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독 광원들의 인권 옹호와 생존을 위해 1975년 11월 30일 「재독한인노동자연맹(노연)」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광업소가 밀집되어있는 루르 지역(Ruhrgebiet)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신분상의 위협은 간호사들에게도 예는 아니었다. 1976년 4월 50여명의 여성들이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에서 한국 간호사들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갖은 후 「재독 한국여성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이어 '재독 한국인간호사 추방반대' 서명운동에 나섰고, 마침내 그들은 '무기한 체류허가(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를 쟁취했다.

이 이외에도 「전태일 기념사업회 유럽지부」(1986.2.1.)가 보쿰(Bochum)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서베를린에서는 「노동교실」을 만들어 활발히 움직였다.

독일인들의 한국에 대한 열정은 각별하다. 특히, 동백림사건 이후 끊임 없이 한국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일 내 지식인들과 연대해 「한국 연대위원회(KOREA-KOMITEE)」 만들어졌고, 이 단체가 한국민주화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3년 「한국협의회(KOREA-VERBAND)」로 개칭, 에센(Essen)에 있는 Asienhaus내 사무실을 두고 한국문제에 관해 끊임없는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문화단체를 결성, 문화운동 또한 활발했다. 이외에도 각 지역의 주말한글학교를 중심으로 모여 2세 교육을 위한 교육사업도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3-4. 통일운동

유럽 내 통일운동이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유럽의 통일운동은 '동백림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게 직접·간접으로 관여했던 인사들이 후일 통일운동의 가교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재 유럽동포들의 공개적 방북이나, 회합은 불가능했다. 동백림사건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데다 한국 기관원들의 활약으로 인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행동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로 접어들며 신분상의 변화 - 거주지 국적취득 혹은 망명신청자 수의 증가 등 - 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공식적으로 대북 접촉이 시작했다. 당시 유럽 내 동포사회에서는 북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었다. 심지어 장사꾼들까지도 겁 없이 대들 정도로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다.

이 때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 선생이 제안한 휴전선에서의 「남·북 음악축전」이 서울과 평양 정부에 의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1989년 3월 13일 휴전선에서 남과 북의 주민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었다. 이 때 한국사회에서는 공안정국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당국은 마침내 축전의 불참을 통보했다.

본격적으로 통일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0년 11월 「범민련 유럽본부」결성 이후부터이다. 유럽 내 통일운동의 통일성을 이끌어내게 된 데 대해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존의 연합체인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민협)」가 해체되게 된 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다. 유럽사회의 특성상 「민협」은 필요한 연합체였다.

1980년부터 유럽에서는 해마다 5월이 오면 '5월 민주제'를 열고있다. 2001년 5월 빌레펠트(Bielefeld) 민주제 자리에서 「한민족 유럽연대」가 창립, 21세기를 맞은 재 유럽민주한인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게 되었다. 「민협」이 해체된 지 9년만의 일이다.

통일에 대한 그림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럽동포사회의 특성상 앞으로 남·북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이들은 남과 북을 바라보는데 편견이 비교적 없다. 그리고 이들에게 수시로 남과 북을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을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비판의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해외동포들의 남북문제 접근에 대해 당국의 전향적인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4. 유럽사회의 특성과 교포사회

유럽사회의 지성은 비교적 냉정하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깨어있는 유럽인 다수가 투쟁하는 한국민중과 연대,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하는데 일조 했다고 본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운동엔 한계성이 있다. 우선 수적으로 열악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갖가지 무대가 유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로비 활동엔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먼저 언어, 문화,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은 아니다.

유럽의 민주화운동이 갖고있는 장점을 든다면, 많은 수의 고급두뇌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국제회의에 나가면 약 10개 국어 정도는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졌던 「한민련 유럽본부」의 경우, 사회주의인터(SI)나 유럽 각 국의 진보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한국의 독재정권의 숨통을 조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영어, 불어, 독어 등의 신문을 발간, 짓밟히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세상에 알리는데 한 몫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어느 때고 중요하다. 앞으로도 소중히 가꿔나가야 할 대목이다. 왜냐하면 민주화된 정부가 들어설 경우, 이러한 채널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유럽에 거주하는 동포 2세들의 직업은 다양하다. 이 들 중 많은 수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유럽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위상도 국내 상황이 좌우한다는 사실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국 동포들에게 전하는 글

해외동포 민주화운동학술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을 대표하여 열렬한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려 한통련이 한국 정부당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통련의 전신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결성 경위와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찍히기까지의 활동내용 및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에 의한 '유신체제'의 선포로 조성된 정세는 해내의 동포들에게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쫓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화답하여 5-16 군사쿠데타 이래 민단 내에서 민주화와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해 온 양심세력은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강력히 벌여 나가기로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일동포 양심세력의 대표들은 당시 도쿄에 머물고 계셨던 김대중선생을 만나 협의한 결과 서로 손잡고 해외에서 민주화와 조국통일운동을 벌여나갈 것과 그 운동을 지도할 조직으로서 한민통을 결성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따라 1973년 8월 13일에 발기대회, 15일에 결성선언대회를 가지고 출범의 뜻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민통의 결성은 유신통치하에서 첫 번째로 나온 공개적인 민주 통일운동단체의 출현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민통 결성이 임박하고 있었던 8월 8일에 김대중 선생이 한국중앙정보부의 특별공작대에 의하여 납치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사정으로 하여 한민통은 준비단계에서부터 김대중선생 구출 운동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이면서 반유신 민주화투쟁을 전개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한민통이 지퍼 올린 김대중 선생 구출과 반유신 민주화의 불길은 삼시간에 미주와 유럽 등 세계각지로 먼저 사면팔방에서 유신독재정권에 맹공격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한민통은 김대중 선생을 납치한 범인을 한국중앙정보부로 단정하고 그들의 만행을 온 세상에 폭로함으로써 박 독재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고 암살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김대중 선생의 생명을 구해 냈습니다. 김대중 선생의 생명을 구해내고 반유신 민주화의 불길을 세계 각지로 타 번지게 한 것은 한민통이 결성 초기에 거둔 빛나는 운동성과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김대중 선생 구출과 유신독재타도운동이 들불처럼 타고르고 있을 때 마침내 본국에서는 10월 2일, 서울대 학생들이 폭압을 박차고 반유신 투쟁에 쫓기 하였습니다.

또한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눈부신 진출과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군사독재시절에 발생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바람 사나운 거친 이국 땅에서 김대중 선생의 구출운동과 민주화와 조국통일운동을 선도해온 한통련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는 누명을 쓴 채 꿈에도 그리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통련 성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비극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혈육의 정은 그 무엇으로써 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도덕과 윤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모형제가 위독하다거나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에 접하고서도 안타깝게 멀리서 눈물만 흘려야 하는 불효자로 남아있어야 하며 민주화 통일운동 속에서 타계한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골을 고향 땅에 묻어주고 싶어도 그것마저도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외국에서 열리는 학술회의나 국제회의에 초청을 받아도 여권을 발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바른 정치, 인권정치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저들은 말합니다. 본국에 가고 싶으면 반성문을 쓰라고, 참으로 후안무치한 소립니다.

도대체 무엇을 반성하라는 말입니까?

한민통이 김 대중선생구출운동을 벌인 것은 인도상으로 보나 인권존중의 입장에서 보나 도덕 의리 면에서 보나 천만번 정당했으면 했지 그것이 반성할 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주화와 조국통일촉진운동은 온 국민에게 주어진 민족적인 과업이며 그 실현을 위하여 성과 열을 다 바쳐 싸우는 것은 가장 성스러운 애국운동이며 그 운동이 반성할 일이 아님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1973년 한민통을 결성하여 1989년에 한통련으로 조직개편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지난 29년동안 전개한 김 대중선생구출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운동은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며 결코 책벌을 받아야 할 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성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자 본질적으로는 피어린 투쟁으로 엮어져 온 우리 애국민중의 자랑스러운 민족민주운동을 부정하고 저희들을 역사의 반역자로 전락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 이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래왔습니다. 그리고 의리는 저버리지 않으리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허망한 꿈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치지도자는 도덕의리와 공약을 지킬 때 국민의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래왔습니다. 그리고 의리는 저버리지 않으리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허망한 꿈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치지도자는 도덕의리와 공약을 지킬 때 국민의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암흑시대에 저질러진 잘못을 청산하는 것은 '국민의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권에 주어질 역사적 사명일 것입니다. 군사정권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 내려진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 군사정권이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애국단체를 '반국가단체'로 찍은 범칙적 조치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3년 반이 넘은 오늘까지 유지하면서 고향방문까지 막는 반인륜적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난도질하는 행태는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통련에 씌워진 반국가단체라는 누명을 당장 벗기고 그 명예를 회복시키며 모국왕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를 빨리 취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한국민주화운동 학술회의의 성공과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2001년 11월 29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의장 곽동의 드림

자료 1

미주동포 운동사

하와이 이민, 그리고 70년대까지...

2백년전 독립 이후 미국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드는 이민 특히 정치이민의 피난처였다. 동서를 막론하고 자기 나라에서 추방당한 정치망명객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헌법 중에서 자유를 보호하는 조문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런 관계로 미국에서 볼수 있는 현상은 각양각색의 정견과 정치행동일 것이다. 초기 한국이민들 중에서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항의하면서 쓰러져가는 한국 말엽의 비통 속에서 뛰쳐나와 미국으로 이민 온 분들이 상당수가 된다. 특히 1987년 한일 수호조약 이후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와 싸워 이긴 후 미국과의 비밀조약인 카쓰리-태프트(Taft-Katsura) 조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한국을 침략하기 시작한 후부터 이민이 증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한국이민의 수는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인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었다.

한국인의 미국(사실은 하와이였다) 이민은 1903년에 시작하여 2년후인 1905년까지 65척의 선박으로 7,226명에 달했었다. 그 중 637명이 여자였다. 1905년에 이민이 중단된 이유는 그해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으로 한국인의 외국 출입이 정지당했기 때문이다. 하와이에 도착한 7,226명 중에서 1,999명이 하와이를 떠나 미국 본토에 도착했는데 그 중에서 여자는 12명에 불과했었다.

역사적으로 한국인의 미국 또는 하와이 이민은 내부적 혹은 자의적 이라기 보다는 외부적 조건의 작용이 더 강했다. 지금까지 미국에 이민한 이유가 살기 좋은 미국에 이민했다느니, 돈벌기 위한 모험이라느니, 외유의 목적이라느니 하고 이민한 사람들의 자의적 행동에 의한 것으로 말해왔으나 사실은 반대였다.

그때까지 수많은 중국인 이민이 하와이로 모여드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 1882년 하와이 총독정부는 중국인의 하와이 이민을 금지했다. 한국인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떠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이민 중 상당수가 미국 본토서 요구된 철도공사에 종사하기 위해 하와이에서 다시 미국 본토로 건너가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인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서 다음에는 철도공사장에서 입으로 옮길수 없는 무자비한 노동의 수난을 당하였다. (이 글은 신성려님의 하와이 이민약사에서 옮김)

그러나 처음 발디딘 미국 땅에서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자신의 저임금을 쪼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애국심을 보여준다.

이 힘들이 면면히 이어짐으로서 미국동포사회서는 미약하나마 조국의 독립과 민주를 위한 운동들이 계속된다. 아직은 그 자료들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찾아 빛내야할 미주운동의 뿌리이다.

70년대... 소수의 양심세력들이 지켜온 민주주의 불꽃

지금은 이미 정권유지를 위한 조작 사건으로 밝혀진 많은 간첩사건들이 있었다. 박정희 독재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통해 온갖 용공조작으로 애국민주화 세력들을 말살하려 했고 전 국민에 대한 억압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이곳 미주에서는 반유신, 반 박정희 투쟁이 조직화 된다.

당시 미주의 민주화 운동을 이끈 조직을 보면, 뉴욕중심의 미동부는 73년경 임창영, 노광욱, 지창보, 고은이 중심이 되니 재미남기주한인협회가 결성되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다. 76년 미주민주국민연합으로 발전하면서 통일운동에도 주력하게 된다. 서정균의 해외한민보가 미주민련의 대변지 역할을 하였고 이보배여사가 이끄는 여성동우회가 활발한 활동을 했었다.

나성중심의 미서부는 73년 8월 김성락, 차성달, 홍동근, 국영길이 중심이 되어 조국자유수호동지회가 74년에는 김상돈, 차성달이 중심이 된 남가주민주회복국민회가 결성되어 조국의 민주회복과 유신철폐운동을 근간으로 김대중 지지와 양심수 석방등 국내정치 지원운동을 전개해 갔으며 70년말에는 노의선, 김성락이 주도하는 조국토일촉진회가 만들어져 이북알기사업을 전개하면서 통일운동의 발길을 달는다.

이외 김정순, 홍동근, 최진황, 홍운호가 중심이 된 장준하선생 기념사업회와 예정웅, 문성철의 청년그룹이 결성한 4.19선양회가 활동하고 있었다.

80년대.... 79년 궁정동에서 울려 퍼진 한 발의 총소리....

독재자 박정희의 죽음으로 18년 긴 세월의 사슬을 걷고 민주화의 열망이 높아져 가고 있었다. 서울의 봄, 많은 사람들은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따스로운 봄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온 국토는 미낫화와 새 세상에의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었고 미주의 많은 동포들과 망명 아닌 망명생활을 감수해야 했던 미주의 인사들의 감회는 더욱 감숨 뜨거웠다.

그러나 오랜 침묵에서 벗어나 민주화의 열기가 무르익기도 전에, 전두환을 중심으로한 일단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음모들을 진행시켰다. 1212쿠테타로 집권의 기반을 마련한 그들은 마침내 남도 광주에서 피의 학살을 자행하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는 한낱 꿈으로 남아야 했다.

광주항쟁,

그것은 우리 현대사의 방향을 규정한 일대변혁이었으며 이곳 미주에서도 운동사의 획을 긋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광주학살에 분노한 미주의 동포들은 즉각 대책회의를 갖고 김상돈을 대표로 국영길, 노길남, 김운하, 차상달이 중심이 되어 한국민주화운동협의회를 조직하고 전두환 일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일 가진다.

광주항쟁 지도부의 일인이었던 윤한봉의 망명으로 미주에서 본격적 청년조직이 건설되기 시작한다. 그의 활동에 힘입어 재미한국청년연합이 결성되고 전국적 조직으로 확대 되어간다.

레이건의 등장과 무한 군비경쟁으로 미.소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가던 80년대 초 남과 북의 긴장도 고조되어 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주통일운동에 길이 남을 발자취가 있다. 1981년 11월말 비엔나에서 남.북.해외 기독교회의가 개최되어 북과의 만남이 이루어 졌다. 이는 다음의 헬싱키대회에 까지 미주통일운동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과 직선제개헌을 요구하며 시작된 6월 민주화대투쟁의 열기가 이곳 미주에서도 타오르기 시작했다.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성명과 집회가 연일 잇따랐으며 아드모어 공원에서 있었던 최루탄추방대회에서는 수많은 한인동포들이 가두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곳 미주에서도 본격적인 조직활동이 시작된다. 이때 결성된 대표적 단체로 통협을 들 수 있다. 이 당시 비교적 북한방문이 자유로울수 있던 미주동포들은 이산가족을 중시으로, 가족을 찾기 위해 북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몇분의 학자들이 북한 방북기 [분단을 뛰어넘어]를 저술하게 되고 이는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북한에 대한 토론과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 국내통일 운동에서도 통일논의를 본격화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

기독교회의와 [분단을 뛰어넘어]가 큰 힘이 되어 87년 6월 선우학원, 홍동근, 양은식, 전순태, 서정균, 김현환, 김동수 등이 중심이 된 통협이 창립된다. 통협은 이후 미주범민련 결성을 주도하는 등 미주통일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87년에는 나성에서 한국민족연구회가 노길남, 유상준, 손세영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한민족연구회는 이후 민족상과 민족장학상을 제정, 미주의 운동의 활동을 고무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홍동근, 김현환, 홍근수, 강문홍, 강위조 등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종교적 입장에서 통일에 접근하고자 했던 통일신학동지회가 있었다.

새로운 청년 정치.문화운동 단체들의 대동

86년 10월 건강한 민중문화와 1.5세로서 자아를 확립하고 민족문화를 찾고 계승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민중문화연구소(이하 민문연)가 창립된다.

민문연은 매년 봄, 가을로 문화제를 개최하여 동포사회에 건강한 우리 문화와 조국의 민주화, 통일을 위한 공간을 확대하였고 각 한인학생회를 통해 우리문화를 보급하고 민문연의 취지를 전파해 나갔다. 특히, 6월 항쟁 당시 나성지역에서의 대규모 민주화운동을 선도해 나갔으며, 이후 상항의 청년문화원, 뉴욕의 우리문화찾기회 등 미주 타지역의 문화운동조직이 결성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성 청년운동의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87년 민주화 대투쟁 이후 고조되어가던 민주화열기는 마침내 조국통일의 열망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88년 들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한 후보가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소수의 진보진영에서만 이야기 되던 조국통일에 대한 논의가 급기야 전국민 관심사로 떠올랐고, 전국 각 대학의 지지속에 6월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하고 수용하면서 88년은 마침내 통일운동의 원년으로 기록되게 된다. 그러나 6월의 학생회담은 노태우정권의 저지로 말미암아 결국 무산되고 8월 15일 재차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질 것을 결의한다.

88년 7월 어느날 조국통일을 외치며 한 학생이 교내옥상에서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조성만 열사....

한 청년의 죽음은 한국사회를 뒤흔들며 다시금 조국통일의 문제를 급박한 주제로 내놓았다.

이제 암흑 속에 억눌렸던 조국통일의 함성은 전국 각지 각 단체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곳 미주에서도 지지성원과 더불어 통일운동의 불길이 당겨지기 시작했다. 이민의 삶을 살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하던 젊은 청년들이 조국통일과 나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88년 8월 10일 8.15 남북학생회담을 앞두고 민족대단결, 자주, 평화통일의 원칙 천명과 해외동포의 단결로 조국통일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미주청년학생 조국통일투쟁선언문을 발표하고 미주청년 조국통일협의회가 발족한다.

그리고 청협의 2명의 회원이 8.15학생회담에 해외대표로 방북을 하게 된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청년학생들이 만날 그 역사적 현장에 미주의 두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해외동포도 조국통일의 당당한 일 주체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해외동포에게는 예외일수 없고, 통일은 남북해외 7천만 모두의 단결과 협력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해외동포는 당연히 통일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임이 분명한 것이다.

청협의 두 대표는 북의 청년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백두산으로부터 통일대행진을 따라 8월 15일 마침내 남북학생회담의 장소인 판문점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나 햇살무리를 밟고 나타나야 할 남녘의 학우들을 그시각 신촌의 아스팔트를 온몸으로 사슬을 만들며 한걸음 한걸음 전진을 위한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청협의 두 대표가 북부조국을 방문하고 청년학생들이 반통일세력들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즈음, 민문연의 마당에서는 민문연과 청협회원들의 회담성사를 위한 무기한 단식투쟁이 전개되고 있었다. 보름간의 기간동안 사항지역의 젊은이들이 합류하는 등 각 지역 여러 단체와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격려를 보내 주었다. 특히 보름간의 단식투쟁동안 동포사회에서 처음으로 이북바로알기운동이 진행되었는데 하루 두차례 이북영화상영과 통일강연회를 개최하여 연일 백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일대 전기를 마련해 했으며 이로서 미주통일운동의 활성화를 가져오는데 일정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다.

청협 결성 직후 그 산하 조직으로 나성의 민주청년학생회가 10월 1일에, 북가주의 애국청년학생회가 11월 20일 건설되며 미주에 청년통일운동단체가 등장하게 된다.

남에서는 1월 20일 6월항쟁 이후 대중적 기반을 토대로 전민련이 발족하고 이어 3월 1일 전농, 5월 28일 전교조가 결성되면서 전 계층적 전 국민적 민주화, 자주, 통일에의 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에 위협을 느낀 노태우정권은 외부적으로 소위 북방정책의 기초를 설파하고 내적으로는 보수대연합을 추진해 가고 있었다.

마침내 3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으로 통일운동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전대협의 평양축전 참가 결정통보로 8월 대회전을 예고하는 가운데 통일, 반통일 의 한판싸움이 하루하루 긴장속에 다가오고 있었다.

반제연대성, 평화와 친선을 구호로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평양에서 170여 개국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7월 1~8일 까지 열렸다.

미주에서는 청협의 주도하에 시애틀의 통일형제회, 뉴욕의 기독교청년학생회, 조국사랑 시카고 등 미전역의 8개단체가 축전참가준비협의회를 나성에서 결성하였다.

축전동참을 통해 미주청년학생운동의 단결을 도모하고 통일운동을 대중화, 활성화 시킨다는 원칙으로미주대표단을 구성하고 홍보지 발간, 세미나 등 각종 이북바로알기 사업들을 설정, 활동하게 된다. 7월에는 나성, 시애틀, 상항, 뉴욕, 와싱턴DC, 시카고 토론토의 전 지역에서 24명의 미주대표단을 확정하고 나성에서 통일한마당과 통일길놀이를 하고 아도모아공원에서 [대표단 출정식 및 범동포통일축전대회]를 개최했다. 피부색, 종교,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전세계 젊은이들이 반제연대, 평화, 친선을 부르짖던 그곳에서 재일, 재독 해외의 동포청년들과의 연대가 시작되었고 전대협대표 임수경이 등장하면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해외의 청년학생이 같이만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한다.

이 행사는 남북해외의 통일열기가 하나로 결합되고 전세계에 한반도의 통일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외침으로 보여준 쾌거였다. 당시 재미한청련은 백두산에서 판문점에 이르는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토 대행진]을 주도, 전세계의 진보세력에게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알리는 성과를 이루어 낸다.

90년 들어 이세기만에 반드시 조국통일을 이루어 내야할 사명을 통감하며 통일민주화세력은 투쟁의강도를 높여간다. 이에 위협을 더해가던 군사정권과 보수제도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야합하지 않을수 없었고 보수야합 민자당이 탄생했다.

이제 싸움은 쓰러져가는 소수 군부의 무리만이 아니라 역사의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의 무리 전체와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역사의 수레를 끄는 자들과 그것을 막고 선 자들의 싸움이...

이에 통일운동권도 하나의 힘으로 뭉치기 시작한다. 전민련이 8월 15일 범민족대회를 가질 것을 제안하고 남북해외가 개최에 전격합의를 하였다. 노태우 정권의 방해공작으로 판문점의 대회장에는 북과 해외대표만이 참가할수 있었으며 분산 개최 되었지만 남과 북이 만나야 한다는 정당성을 설파하고 통일에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했다. 미주에 있어서 통합과 한민족연구회, 한겨레연합이 중심이 되어 미주대표를 구성, 미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된다.

나성에서는 범민족대회를 지지하는 통일한마당이 민문연과 청협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비록 자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범민족대회의 의의를 공감하면서 남북, 해외의 동포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이어져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렇듯 민족대단결의 기운과 범민족대회의 성과를 안고 1990년 11월 19일 베를린에서 남북해외의 대표가 모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결성에 합의하고 미주에서는 통합, 청협, 한민족연구회를 비롯 여러 가맹단체와 발기인으로 1990년 12월 3일 범민련 재미본부가 결성된다.

90년대 통일원년을 그리며....

91년 노태우 군사정권은 명지대 학생 강경대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를 30여년 넘게 폭력으로 통치해왔던 군부독재 세력의 마지막을 알리는 시작이 되었고 남녘의 민주세력들에게도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결전을 요구하게 되었다.

미주 동포사회에도 통일운동과 함께 청년 정치, 문화단체의 대중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미주에서는 민청과 민문연이 [노태우정권퇴진을 위한 시국대책위원회]를 구성, 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노태우 정권의 공안통치가 빚어낸 결과임을 밝히고 동포사회에서 알리는 노태우 정권 퇴진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근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내현황과 더불어 나성의 동포청년들은 총력을 기울여 2차례의 애국동포결의대회(아드모아 공원)와 성명서 배포 등의 선전, 홍보활동을 펼쳤다.

92년은 미주 청년운동에게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해가 된다. 미국사회의 구조적인 인종차별 정책이 낳은 4.29폭동은 그간 활동의 주 내용을 통일과 남한의 민주화에 두었던 청년 단체들에게 자기 운동의 정체성을 묻는 계기가 되었다. 민청이나 민중문화연구소 모두가 [자주적인 동포사회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내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포대중들과의 밀접한 유대를 위한 활동들은 실천적으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을 가져왔다.

미주 운동은 청년단체들의 잠재적인 정체성 문제제기와 함께 여러 부분에서 폭넓은 성장을 시작한다. 잠시나마 한인타운엔 범민련 미주본부의 사무실인 통일회관이 운영되었고, 남가주 한인 노동상담소의 개설은 미주 진보운동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92년 민중문화연구소는 건강한 이민문화를 찾는 젊은이들의 모임 우리문화공동체로 확대 발전된다. 우리문화공동체의 창립은 그간에 만들어진 대학내의 풍물패들의 발전과 함께 문화운동의 활발한 성장을 가져왔다.

UCLA의 문화패 한올림, UC 산타바바라의 한얼, UC 샌디에고의 두레가 대표적인 학내 문화모임 이었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화려한 시작과는 달리 문민정부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일반 동포대중들의 북과 통일에 대한 인식도 커다란 변화들 가져온다. 미주에서도 북과 해외 동포들과 교류의 폭을 넓혀간다. 특히, 일본 재일동포들의 통일운동과 삶은 미주 청년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소규모이지만 계속되는 교류를 갖게 된다.

민청과 노동상담소 그리고 우리문화공동체가 함께 준비한 한반도평화대회(Korea Peace Conference)는 비록 계속 되지는 못했지만 미국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참여가 있었고 청년들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과한 뜻깊은 실천이 되었다.

95년 1.5세 ~ 2세들의 모임인 KEEP은 한국방문 활동을 가졌다. 대부분 영어권 청년들로 구성된 KEEP은 한국의 역사와 진보적 통일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문화배우기, 농촌봉사활동, 그리고 범민족대회 참가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

KEEP의 창립과 활동은 미주 한인들의 통일운동과 동포사회 권익운동에 있어서 1.5~2세들의 확대 재생산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계기로 평가되어진다.

김영삼 정부용 이전 군부독재세력보다 더한 비난을 받으며 물러가고 김대중 정부가 시작된다. 미주의 조국통일 운동단체들의 여러 사건과 상황에 발맞추어 자신들의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여러 통일운동 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하던 민간차원의 교류확대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른바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이 시작되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주에서도 민간차원의 교류의 폭이 확대되었다. 경제,문화부문에서 이전에 볼수 없었던 활발한 남.북의 만남의 공간이 만들어 졌다. 재미동포전국연합은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미주동포사회에서 대북교류의 중심적인 단체로 자리잡았다. 또한 90년대 중반이후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이 건설되어 미주운동의 한축을 담당하고, 국내 민주노동당을 지원하는 민주노동당미주

후원회가 결성되었다. 99년에는 한반도 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간 인터넷 신문 민족통신이 만들어 졌다.

21세기를 맞으며....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미주동포사회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성과를 지켜내고 확대시키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보다 폭넓고 대중적인, 실천적인 미주통일운동의 전망이 요구되는 때이다.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물음에 첫 대답을, 지금 우리는 시작하려고 한다.

재일동포 운동사

1973년	8.8 김대중씨 납치사건
	3·1절 54주년 민단-총련 공동집회(도쿄, 가나가와, 남북간의 다방면적 교류 합작실현) / 4월혁명 13주년 집회 (한청, 각지) / 남북공동성명 1주년 민단-총련 공동집회(도쿄, 가나가와), 한청-조청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촉진) 공동기자회견 (중앙), 공동집회(오사카) / 김대중씨 구출운동 8.9 '김대중선생 구출대책위원회'결성 / 8.13 '한국민주회북통일촉진국민회의 (한민통)'결성 / 8.15 한민통 결성 선언-김대중선생 납치 규탄 집회 / 9.8 김대중선생 구출집회(중앙, 한민통, 구대위) / 9.23 간사이집회(구대위 오사카, 교토, 효고) / 10.13 김대중선생 구출 본국학생들의 반독재투쟁지원 집회(중앙) / 11.8 본국학생과 지식인들의 민주구국투쟁 열렬 지원-반독재투쟁지원-김대중선생의 재방일 요구집회(중앙, 구대위) / 12.9 본국동포들의 구국투쟁지원-한일각료회담 반대-김대중선생의 재방일요구(중앙)
1974년	8.15 박대통령 저격사건 11.22-23 포드 미대통령 방한
	2.3 박 정권의 긴급조치-파쇼폭압 규탄집회(중앙) / 3.1절 55주년-박 정권 퇴진요구 집회 / 4.3 본국 청년학생들의 애국투쟁 열렬지원 집회 / 4월혁명 14주년-본국 학생들의 민주구국투쟁 열렬 지원집회 / 6.7 김대중씨에 대한 부당 소환 항의-애국인사 청년학생들의 석방요구집회 / 남북공동성명 2주년-박 매국정권의 반통일 파쇼책동 규탄집회 / 8.8 사건 1주년-김대중선생 출국-김지하씨 등 모든 애국인사 석방요구 집회 / 광복절 29주년-박 정권 타도집회 / 포드 대통령 방한 반대 11.5 본국학생들의 민주화투쟁합세 / 11.18-박 독재정권 퇴진요구 집회(한청) / 11.18 포드 미대통령 방한반대-박 정권타도집회 / 12.13 김지하와 한국문화의 밤 (진오귀 첫 공연)
1975년	2.12 '유신헌법'국민투표 / 4.30 베트남전쟁 종결
	1.19 한일청년 우호 연대집회 / 2.2 '국민투표'반대집회 / 3.1절 56주년-박 정권퇴진 요구집회 / 4.3김지하의 밤 '진오귀' 공연운동(한청) / 4월혁명 15주년-박 정권 타도집회 / 5.2 한일공동 시국강연회-인도지나정세와 한국 / 남북공동성명 3주년-박 정권의 전쟁도발책동 규탄집회 / 8.8 사건 2주년-한일 양민족 분격집회 / 광복절30주년-박 정권의 분단고정화책동 규탄집회 / 9.1 제 8차 한일각료회담반대 자전거데모(한청), 가두선전 / 11.4 재일 한국인 정치범 기록영화 '고발'상영운동 / 11.2 김지하 '고행 1974'공연운동(한청)

1976년	3.1 김대중씨 등 민주인사 '민주구국선언' 발표 3.1절 57주년-박 정권 타도집회 / 3.18 민주구국선언 지지-박 독재규탄, 민주인사 석방집회 / 4.5 한일시민 대연설회 (김대중사건-록히드비리)/4월 혁명 16주년-박 정권 타도집회(한청) / 5.2- '민주구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부당 재판항의 즉시석방요구' 단식투쟁 / 6.19 3.1 민주구국선언지지-전정치범석방요구 100만명 서명운동(11.23까지 이어짐) / 남북공동성명 4주년 심포지 엄(한일관계와 남북통일) / 8.8사건 3주년 한일 공동집회(다시 김대중씨 사건을 고발한 다) / 8.12-14 한국문제 긴급국제회의(한일공동주최) / 광복절 31주년-한국민주화투쟁을 지지하는 긴급 국제대집회 / 9.14-재일 한국인 고령자 단식투쟁(김대중,김지하씨 등 인사석방요구) / 10.16 생명 위협한 김대중선생 즉시석방 요구집회(구대위,한청) / 11.23 100만명 서명 초과달성-3.1 민주구국선언 지지-전 정치범 즉시석방요구 한일 공동집회(103만명) /12.4 '3.1 민주구국선언'지지-정치범구원 바자(한일공동)
1977년	3.22 윤보선씨 등 민주인사, '민주구국헌장' 발표 3.1 절 58주년-3.1 민주구국선언 선포 1주년기념-박 독재정권퇴진 요구집회(각지) / 4월혁명 17주년 -한국의 민주화쟁취 청년집회(한청) / 5.6 한미문제 국제회의 보고회(미국에 신한국정책촉구, 한일공동) / 5.15 - '민주구국헌장 서명운동' / 6.10-29 일본 7지역 서울로 가는 길' 페스티벌(한청.한국민주화지원 문화공연운동) / 7.5 김대중선생 원상 회복 요구집회(구대위) / 8.8 사건 4주년-'어디까지나 원상 회복요구' 한일공동집회 / 8.11-8.14 해외한국인민주운동 대표자회의 / 8.13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 연합(한민련) 결성 / 광복절 32주년-한민련결성 선포집회 / 9.15김대중사건 국민법정(한일공동) / 11.12 전태일씨 분신항의 7주년 한일민중연대 집회-한국노동자들의 외침을 듣는 모임(한민통 주최)
1978년	7.6 통일주체국민회의, 박대통령을 선출 2.12- '유신선거거부 민주쟁취 100 일간운동' / 3.1 절 9주년- 유신선거 반대 집회 / 4월혁명 15주년-박 독재정권 퇴진요구집회, 각 지방 집회 (통일주체 국민회의선거규탄 박 정권퇴진요구) / 남북공동성명 6주년-통일문제 강연집회 / 7.2- '박 정권퇴진요구, 김대중선생 원상회복쟁취 50일간운동' / 8.8사건 5주년-'김대중씨의 원상회복을'집회 / 광복절 33주년-민주주의국민연합지지집회 / 9.5 단식투쟁(김대중선생의 무기한 단식투쟁지원) / 10.17 박 정권퇴진요구, 10.17 본국 귀기 호응집회 / 10.25-'불길의 외침' (전태일씨, 이소선어머니의 투쟁을 표현한 창작극) 6지역 공연운동(한청) / 11.13 전태일씨 분신항의 8주년 한일연대 집회(한국노동자들의 투쟁을 광범하게 지원하자-이소선 어머니의 영화 '어머니 분노는 타오르다' 상영운동)

1979년	6.29-7.1 카터 미대통령 방한 / 8.11 YH무역 노동자 탄압사건 / 10.4 김영삼 신민당총재 국회의원 제명 / 16 부산-마산궤기 / 26 박 대통령 사살 / 12.6 통일주체 국민회의 최규하씨를 대통령에 선출 / 12 전두환 숙군쿠 데타 1.21- '한국민주화 지원을 위한 노동자 전정치 범의 투쟁지원 서명 모금운동'(한청) / 3.1 절 60주년-민주민족통일촉진집회 / 4월혁명 19주년집회 (한청, 한학등) / 6.29 카터방한 반대집회 / 남북공동 성명 7주년-통일문제 강연집회(한민통) / 8.8사건 6주년 '김대중 납치사건 정치결탁 철폐 요구'집회 (한일공동) / 광복절 34주년 집회 (각지, 민주회복, 통일촉진) / YH노동자-신민당 지원운동 / 9.2 김경숙씨 학살만행규탄 YH노동자 농민회 신민당의 투쟁지원 / 9.25 신민당 애국학생들에 대한 탄압책동규탄 범국민적 민주화투쟁지원집회 / 10.13 '신민당지원 대책위원회' 설치 / 12.2'통일주체 국민회의의에 의한 대통령선거 단호 반대'집회
1980년	2.29 김대중씨 등 공민권 회복 5.18 광주민중항쟁 (비상계엄령 전국확대) / 27 광주를 군사제압 8.27 통일 주체 국민회의,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 / 9.17 군법회의, 1심에서 김대중씨에게 사형판결 (11.3 2심도 사형) .1절 61주년-유신체제 완전청산 민주화촉진 집회 / 4월혁명 20주년-유신체제 완전철폐집회(한청) / 광주절기연대운동 5.18 '최규하,전두환의 군사폭압 항의'집회 / 6.1 광주대학살규탄 군정타도집회(각 지방) / 6.1-10 광주대학살규탄 군정타도 전국 캐러밴 / 6.10광주대학살규탄 희생자추도집회, '한국1980년-피의 항쟁'영화제작, 상영운동 / 김대중씨 구출운동 7.26-UN제출 20만명 서명 천막투쟁 / 8.1- 단식투쟁 / 10.5 한일연대집회(김대중씨구출실현-UN요청단 파견 서명 103만명 달성)운동 / 8.4 집회(김대중씨에 대한 '날조기소'폭로, 8.8사건 7주년집회(각지) / 8.13-14 긴급해외한국인대표자 회의 (김대중선생 구출 한국민주화)-김 대중선생구출 해외 한국인 연락회의 '실립 / 광복절 35주년 집회(김대중 구출, 전두환 군정타도) / 9.1 김 대중선생구출 전두환 '대통령 취임' 규탄집회 / 11. 2 일본국회 청원서명-천막투쟁 / 11.8 한일 연대집회 (청원서명 12만명) / 12.4 사형저지 단식투쟁 / 12.14 제2차 사형저지 단식투쟁 / 12.25 김대중씨에 대한 사형집행저지 석방요구 전국총궐기집회 / 12.29 '김대중씨를 죽이지 말라!' 한일 공동집회
1981년	1.23 대법원 김대중씨에 대한 사형 판결-감형 2.25 대통령선거인단 전 대통령 선출 1월 연일 각지서 김대중씨 사형판결 규탄 구출행동, 주일대사관 항의. 단식투쟁, 집회, 가두선전 / 2월 '대통령선거' 반대집회(각지) / 3.1절 62주년 집회(각지) / 4월혁명 21주년-전두환 군정타도 미일외세의 지원규탄 청년학생 집회 (한청,한학등) / 5.16-18 한국민주화지원 긴급세계대회(ASKOD,한국에 자유와 정의를) / 19 광주궐기 1주년 한국민주화지원 세계민중대회, 각지 보고집회 / 남북공동성명 9주년-시국강연회(한민통) / 8.8사건 8주년집회(각지, 김대중씨 구출을 요구)

	7.4 일본의무성 요청(아베외상 방한중지 전두환 방일초청 취소, 서명 9.5만명) / 4월혁명 24주년-전두환 방일 저지 한미일 군사체제 분쇄 청년학생집회(한청, 한학동), 광주궐기 4주년본국민주화투쟁지원 전두환 방일반대집회 / 6.26-7.3 관서지방 캐러밴 / 7.2 한일외상회담 전두환 방일저지 집회 / 광복절 39주년 집회(각지, 전두환 방일저지)각지서 단식투쟁 / 9.6 전두환의 반민족적 방일행각 단호반대집회 / 전태일분신항의 14주년 청계피복노조 복구지원 격려전보 FAX 보내기, 노동자 지원바자-연극공연 .마당극(각지)
1985년	2.8 김대중씨 미국에서 귀국 / 2.12 총선거 신한민주당 약진 5.23 서울 시내 5개 대학생들 미문화원 점거 농성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추구
	2월 김대중씨 귀국지원 '김대중씨의 안전한 귀국과 자유를! 긴급행동' 결성-가두선전/팀스피리트 85 반대 2.1 미 대사관에 중지요청 / 2.21 한일공동집회, 가두선전 / 3.1 절 66주년 집회(시국강연회 .각지) / 3.11-16 해외동포회의 한민련, 2.12총선 후의 정세) / 4월혁명 25주년-국내 민주화 투쟁지원 전두환방미저지집회 / 광주궐기 5주년 집회(각지, 본국민주화투쟁지원 전두환 군사독재타도), 주일한국대사관 항의방문 / 5.24 주일미국대사관 항의방문 (광주학살 사과요구, 오사카서도) / 5.25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한일연대집회 / 6월 '한일조약 20주년을 검증한다' 행동 문화공연, 한일 활동가 교류집회, 각지서도 / 광복절 40주년집회('학원안전법' 반대 전두환 군사독재 타도) / 10.6 전두환에 의한 국내민주화운동 탄압규탄 / 12.14 한국민주화지원 모임 (오사카서, 바자, 사진전시회, 콘서트, 마당극)
1986년	1.12 산민당 민주협 민주당제 개헌 1천만명 서명 시작 9.20-21 나카소네 일본 수상 방한
	/ 1.23 고문 용공 조작저지 재일한국인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의견광고게재 모금운동, 민주제개헌추진지원 / 3.1절 67주년 집회(민주제개헌쟁취 전두환 군사독재 타도) / 4.1 민주제개헌을 위해 싸우는 한국민주단체에 대한 지지 격려 '서명운동 / 4.19-20 민주제개헌추진 해외동포대회 (한민련) / 4월혁명 28주년-민주제개헌쟁취 전두환 군사독재 타도 집회(오사카서) / 4.21 '민주제개헌추진 재일한국인 위원회'설치 / 5.18 광주궐기 6주년 집회, 민주제개헌의 마당'공연(추진위) / 남북공동성명 14주년-시국강연회(각지서) / 광복절 41주년 집회(각지, 민주제개헌) / 9.14 나카소네 방한 반대 후지오 망언규탄집회 / 11.16 민통련 등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파괴탄압 규탄집회 / 11.26 '재일 한국민주여성회' 결성
1987년	1.14 박종철군 고문학살 / 4.13 전두환 호헌 담화 / 6.10 6월 민주항쟁 / 26 민주화요구평화대행진 / 29 노태우 선언(직선제 수용)12.17 대통령선거 노태우씨를 대통령으로 선출

	박종철군 학살규탄 민주제개헌요구 / 2.1 애국학생 박종철군 고문학살규탄 전두환 살인정권 퇴진요구 집회, 각지서 가두선전 / 팀 스피리트87 반대 가두선전 / 3.1절 68주년 집회(각지, 시국강연회) / 4월혁명 27주년-영구집권음모분쇄 직선제개헌관철집회 (오사카서) / 민주제개헌쟁취 전두환 군사독재 타도집회(오사카서) / 광주궐기 7주년 집회 (각지서,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제개헌 쟁취) / 6.10 박종철군 고문학살 은폐규탄 민주제개헌 쟁취집회 / 6.25 4.13 호헌조치 전면철폐 전두환 퇴진요구 집회 / 6.26 관서지방 천막농성 투쟁 / 광복절 42주년 집회(각지, 민주화촉진) / 10.22 한민련창립 10주년 해외한국인대회(민주정권쟁취) / 11.22 관서집회 (민주정권쟁취 군사독재 종식) / 12.6 동포밀집지 시위 행진
1988년	2.24-25 다케시타 일본수상 방한 3.29 서울대생 김종기군 남북학생회담 제의 6.10 남북학생회담 쟁취 투쟁 8.7 조국통일 국토순례대행진 9.17-10.2 서울 올림픽 단독개최
	노태우 부정선거규탄 1월 박종철군 1주기 모임(각지, 부정선거규탄) / 2월 팀스피리트88 반대 2.17 주일미대사관에 중지요청 / 다케시타 수상 방한 반대운동 2.17 강연집회(한일연대, 다케시타 수상 방한 반대) / 21 관서집회, 각지서 가두선전 / 3.1절 69주년 집회(노태우 부정집권 규탄) / 4월혁명 28주년-노태우의 위장민주화분쇄 민중민주화운동 지원집회 / 광주궐기 8주년 집회(광주사태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요구) / 5월 NYT지 의견광고 게재운동(한국의 핵무기철거요구 6월 UN군축총회) / 남북학생 회담지지 6.12-26 전국캐러밴(한국의 완전민주화 남북통일촉진) / 7.2-3 해외동포회의 궐기대회(한민련,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민족통일추진) / 7.12- 서명엽서 보내기운동 (공동개최요구) / 8.3 재일한국청년학생대표단 결성('민중화해를 위한 국토순례대행진') / 8.7 국토순례대행진 남북학생회담 단호지지 집회-전국캐러밴(남북학생회담 실현) / 광복절 43주년 집회(남북학생회담 실현, 민족통일촉진) / 전태일씨 분신항의 18주년 동포들의 모임(오사카서, 통일촉진, 노동운동연대, 양심수석방)
1989년	1.6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범민족대회 해외추진본부 조직화를 제안 1.21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발족 / 3.25 문익환 목사 방북 / 5.10 이철규 고문학살사건 / 6.30 임수경 전대협 대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8.15 구속
	팀스피리트 89 반대 가두선전 2.5 남북대화에 역행하는 팀스피리트 89 중지요구 관동-관서집회(한청, 학동) / 2.12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출범 / 3.30 범민족 대회 일본지역추진본부 결성 / 이철규군 고문학살규탄 광주궐기 9주년 집회(각지서, 애국학생 이철규열사의 고문학살 진상규명요구, 광주학살 5공비리 척결)

	5.30 '애국학생 이철규열사 고문살인 규명 일본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 임수경씨 방북지지 공동성명발표 17주년 집회(범민족대회 일본 추진본부, 통일의 대문을 열자) / 7.23 전대협 임수경대표의 조국종단 대행진 열렬지지 노태우 군부정권의 폭력탄압 규탄집회 / 광복절 44주년 집회(범민족대회 일본 추진본부, 통일염원 범민족축전) / 9월 임수경씨 등 석방요구 서명운동 / 10.6 문익환 목사 등 석방요구 가두선전 / 12월 '백두에 서 한라까지 조국은 하나다 한국민주화 통일의 모임'(각지서, 문화공연, 창작마당, 임수경대표의 기록영화제작 상영, 바자, 강연 등)
1990년	1.22 민주자유당 발족(민정, 민주, 공화 3당 야합) / 전노협 출범 5.24 노태우 대통령 방일, 8.15 제1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 개최
	1월 틱스피리트 90 반대 미 상하원 의원에게 중지요구 서한 보내기 / 3.6 전노협지원 콘서트(한일공동) / 3.16 임수경씨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5만명분)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소 / 노태우 방일반대 4월혁명 30 주년·노태우 방일단호반대 민자당 분쇄집회, 광주궐기 10주년집회(한일연대,각지서, 노태우 방일 단호반대 민자당해체 노태우정권 퇴진요구) / 범민족대회추진 7.1 해외한국동포대회(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지지) / 7.7 우리말옹변대회(한청, 남북공동성명 18주년 기념) / 8.15 제 1차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판문점)참가 / 9월 보고대회(범민련 일본 지역본부, 각지) / 10.7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일본지역본부 발족(범민족대회 일본지역 추진본부) / 12.4-6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해외본부 결성 (베를린에 서) / 12.16 통일을 위한 모임(범민련 일본지역본부,도쿄,오사카서)

출처 '민족시보'(한통련기관지) 1973-1990년

자료 3

<자료 3—월간 말 일본 현지취재 / 재일 한통련의 진실>

독재정권은 갔어도 반국가단체 족쇄는 여전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정책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적극 동참해왔던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하지만 그들은 지금 '반국가단체'란 낙인 속에 고국방문의 길마저 가로막힌 상태다. 『말』이 일본 현지취재를 통해 반국가단체 한통련의 진실을 확인했다.

지난 30년 가까이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 한통련의 전신은 1973년 결성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한민통)이며, 1989년 한통련으로 재편됐다—은 금기의 대상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일본 교포사회 내에서 유신 독재 타도운동을 적극 전개했던 한민통을 “총련의 자금을 받아 친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몰아붙였고, 1978년 이 조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그후 한민통과 연락을 취하거나 그 회원을 만나는 것은 곧 간첩행위로 처벌돼 관련자들에게는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유신독재 붕괴 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차례로 들어섰지만 이러한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 한통련 관계자들에게는 (그들이 모두 한국국적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입국불허’ 조치가 발효중이다. 또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 역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죄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9월 8일 오후 3시 일본 도쿄 메이지대학 부근에 있는 한통련 사무실을 찾았을 때, 한통련 간부들이 한국언론으로서 최초로 자신들을 취재하기 위해 온 기사를 반갑게 맞이하기에 앞서 “신상에 문제가 없겠냐”며 걱정부터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지난 시절 술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고국에 돌아가 줄줄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봤던 그들로서는 당연한 반응이기도 했다.

기자의 신상부터 걱정한 그들

한통련 사무실의 정경은 흡사 한국의 사회단체 사무실을 연상시켰다. 50여 명의 사무실은 구석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신문과 자료들로 더욱 좁아보였다. 서고에는 『말』을 비롯한 한국잡지와 단행본들이 촘촘히 꽂혀 있었다.

“저희 회원들 내에서 『말』지에 대한 신뢰는 대단합니다. 한국의 민중·통일운동의 동향과 전망을 이해하는 데 『말』지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서고에 꽂힌 『말』을 바라보는 기자에게 김정부 사무총장이 말을 건넸다. 교포 2세인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이어 한민통 의장을 역임했던 김재화(작고), 배동호 선생(작고)과 현 한통련 광동의 의장의 뒤를 잇는 한통련 운동 2세대의 대표주자다. 그는 박정희 독재타도와 김대중 구출·구명운동을 적극 전개했던 1970~80년대 한통련의 활동이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자주·민주·통일운동으로 발전해나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현재 한통련 사업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동포사회도 이제 3, 4세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면서 “갈수록 일본사회로의 귀화, 동화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포들에게 민족주체성을 심어주고 조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사업이 현재 한통련의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통련은 말 그대로 고군분투중이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이하 총련)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십 개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민족의식을 적극 높여나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국적을 가진 그들이 총련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는 없는 처지다.(40만 회원을 거느린 민단의 경우 도쿄와 오사카 등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수는 몇 개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통련은 자체적인 우리말, 우리역사 강습회를 통해 동포 3, 4세의 교육을 책임져나가고 있다.

그래서인가 이들은 한국정부의 교포정책에 대해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의 교포정책이 “민족을 내세우며 일본사회 내에서 충돌하느니 차라리 귀화하는 것이 낫다”는 식이란 것이다. 역사 교과서 왜곡에서 드러나듯 갈수록 극우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한국인에 대한 차별정책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일본에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한 세대가 더 흐른다면 “살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귀화하는 것이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며 그들은 우려했다. 본국에서 버림받고, 일본에서 차별받으며 살아야 하는 동포들의 최종선택은 결국 ‘귀화’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프게 다가왔다.

정부의 교포정책, 차라리 귀화하는 게 낫다(?)

민족의 주체성을 찾기 위한 한통련의 활동에서 특히 통일운동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황영치 선전국장은 그 의의를 이렇게 정리한다.

“지난 시절 동포사회는 뿌리깊은 분단, 냉전체제 속에 인간다운 삶마저 저버릴 길 강요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동포할머니가 일본폭력배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봐도 바로 달려가 그 할머니를 병원응급실로 데려갈 수 없어요. 먼저 그 할머니에게 ‘총련’ 소속인지, ‘민단’ 소속인지를 묻고 ‘총련’ 이라면 그냥 못 본 척 지나쳐야만 합니다. 상황이 이렇진대 일본사람들이 서로 갈라져 싸우는 우릴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국 땅, 그것도 동포에 대한 차별이 극심한 일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족의 통일은 이처럼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민족주체성 확립의 출발은 바로 남도, 북도 내 조국이라는 통일정신입니다.”

그러나 민족주체성을 찾기 위해 통일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그 때문에 조국정부로부터 더욱 배척당하고 있다.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씨의 방북으로 통일문제에 눈이 트인 그들은 1990년 남북 민간통일운동이 합의한 범민족대회 개최와 범민련 결성에 적극 나섰다. 범민련 해외본부 공동사무국을 맡아 범민련 일본본부를 주도적으로 꾸려 나갔고, 1990년 1차 범민족대회 참여를 위해 남북 정부에 입국허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쪽 정부는 한통련의 입국을 ‘불허’했고, 1백여 명의 한통련 회원들은 범민족대회 해외대표단의 일원으로 ‘북부 조국’만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

1차 범민족대회 후 한통련은 동포사회 내의 통일의식 고양은 물론 양심적인 일본인들과도 한(조선)민족의 통일을 공유하는 장으로 매년 통일한마당을 개최해왔

다. 특히 올해 통일한마당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손마행 사무부총장의 설명이다.

“올해는 도쿄, 오사카를 비롯해 모두 다섯 지역에서 통일한마당을 개최했는데 1만 명 이상이 모여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동포사회 내에서는 어느 때보다 통일 기운이 높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눈물 속에 지켜본 동포들은 지금 민족적 긍지로 충만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남북간의 대립·대결 의식보다 민족동질성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남북을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야말로 남북화해,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무엇을 반성하란 말인가”

남북정상회담 후 일본에서는 오랜 반목과 대립을 거듭했던 총련과 민단 간의 협력 분위기도 높아가고 있다. 도쿄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8·15 행사를 민단·총련 공동행사로 치르기도 했고, 총련의 남쪽 고향방문 결정을 계기로 동포사회 내의 분단장벽은 일거에 무너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보면 여전히 ‘남남 분단’은 그대로다. 바로 민단과 한통련의 대립이 그것이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규탄으로 입장이 갈렸던 민단 내부는 1972년 군사정권을 지지하던 민단 지도부가 반유신정권 투쟁에 앞장선 개혁파들을 제명함으로써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박정희 정권의 비호 아래 갈수록 어용성을 드러내는 민단 지도부에 맞서 동포단체로서 민단의 자주성을 지키려 했던 개혁파들은 독자적인 조직—1973년 결성된 한민통으로 당시 일본에 체류하면서 박정희정권 타도운동을 벌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초대 의장을 맡았다—을 결성해 국내 민주화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이때부터 ‘반정부인사’로 몰린 이들은 고국 정부로부터도, 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던 민단으로부터도 철저히 배척당해야만 했다.

김정부 사무총장은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에 발맞춰 총련과의 교류를 시도하는 민단의 태도에 대해 “격세지감”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동안 동포사회 내에서 반북대결의식을 고취시켜왔던 민단이 총련과의 단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문제는 한통련에 대한 그들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총련과의 단합을 말하면서도 철저히 한통련을 배제하려드는 민단의 처사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그동안 동포사회 내 통일운동의 중심은 한통

련”이었음을 강조하며 “민단이 진정으로 민족대단결을 이루겠다고 하면 먼저 한통련의 실체부터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문제는 한통련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일 것이다. 군사정권을 극복했다고 자부한 문민정부도, 국민의 정부임을 강조하고 있는 현 김대중 정부도 한통련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정권 시절의 인식을 뛰어넘지 못했다. 특히 한때 한통련과는 동지적 관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한통련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다. 지난 8·15에 즈음해 정부가 한통련을 비롯한 해외 ‘반정부인사’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면 고국방문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에도 김은택 부의장은 이렇게 반문했다.

“도대체 우리가 뭘 반성해야 한단 말입니까. 유신독재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에 맞서 투쟁한 것을 반성하란 말입니까. 아니면 일본에서 온갖 차별에 맞서 민족주체성을 지켜내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투쟁한 것을 반성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정부에 바라는 것은 자유로운 고국왕래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는 과거 반독재투쟁을 벌였던 ‘동지’들에 대해선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에 의해 명예회복은 물론 물질적인 보상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해외의 반독재투사들에 대해서만큼은 ‘반정부인사’란 딱지를 붙여놓고 기피한다는 것은 한통련의 주장대로 ‘역사 바로세우기’와는 거리가 먼 처사임이 틀림없다.

한통련은 지난해부터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들을 ‘반국가단체’란 울가미로 엮어매고 있는 법적 근거를 허물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한통련의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운동에는 10만 명이 넘는 재일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동참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이 서명용지를 한국정부에 전달하고자 일본의 사회단체 간부들이 방한하기도 했다. 고국으로 오는 길이 막힌 그들을 대신해서.

‘조국은, 민족은, 동포는 하나’

9월 8일 저녁 한통련 간부들과 함께 한통련 사무실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재일 한국청년동맹—한청, 1960년 10월 전신인 민단 대한청년단이 명칭을 변경한

조직으로 민단은 1972년 민단 개혁파들을 제명하면서 이들의 영향 아래 있던 한 청까지 산하조직 자격을 박탈했다—중앙본부 사무실을 찾았다. 한통련 회원단체인 한청은 20~30대의 교포 3, 4세를 중심으로 한 청년조직이다. 그들은 추석선 물로 한 되짜리 소주 페트병을 들고 찾아온 비슷한 연배의 기사를 뜨겁게 맞아 주었다. 곧바로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밤이 이슬하도록 술잔을 기울였다.

“동포청년들에게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동포청년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자신이 한국사람임을 감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귀화하지 않고선 당장 생존문제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하기에 자신이 한국인임을 밝히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란 여간한 결심이 아니고선 힘든 일 이죠.”

뒷골목 건달패로 살아가다 “한청 활동을 통해 뒤늦게 우리말을 배우고 민족적 자각을 얻었다”는 강성실 위원장의 말이다. 동포청년들의 경우 그 옛 세대들과는 달리 민족적 자각은 없지만 대신 냉전이데올로기로부터는 자유로운 편이다. 따라서 스스로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순간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고 한다. “한청 회원들을 모두 당당한 통일투사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이정수 부위원장은 특히 “조국을 방문해 통일운동에 헌신하는 청년·학생들을 만나 민족의 운명과 통일조국의 미래를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다”는 소망을 털어놓았다.

이들에게 정권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때론 목숨까지 바쳐가며 민주주의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간 고국의 청년들은 감동 그 자체인 듯했다. 그러나 기자에게는 이국 땅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민족’을 버리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더욱 감동으로 와닿았다. 하지만 이들에게 조국방문의 길은 막혀 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고향 땅, 친척들을 그리워하다 “고향방문의 길이 열리면 꼭 선산에 유골을 뿌려달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등진 할아버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던 이들이지만 그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한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한통련은 자신들의 ‘명예회복과 본국왕래 자유보장’을 허용해달라는 국회청원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이기욱, 임종인, 김진국 변호사 등 민변 동북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이번 청원은 소개의원을 구하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0~80년대 재야운동 출신 의원들마저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문득 한통련 사무실에 걸린 글귀가 떠올랐다. ‘조국은, 민족은, 동포는 하나다.’ 과연 언제쯤이야 우리는 그들과 하나될 수 있을까. (월간 말 2000년 10월호 기사)

자료 4

<자료 4—월간 말 일본 현지취재 | 한통련 광동의 의장 단독 인터뷰>

“우릴 방치하는 건 의리상 있을 수 없는 일”

일본취재 이틀날인 9월 9일 광동의 의장(70) 인터뷰를 위해 한통련 사무실을 찾은 기자에게 한통련 기관지 「민족시보」의 객수호 부주필이 전날 「요미우리 신문」을 건넸다. 1면 사이드 톱으로 ‘조선총련, 최초 방한단’ 이란 제목 아래 ‘9월 22일부터 1주일 동안 63명의 총련 방한단이 한국을 최초 방문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한통련 간부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후 열린 적십자회담에서 총련 동포들의 남쪽 고향방문을 결정했을 때, 한통련은 주일한국영사관에 한통련 회원들의 고향방문도 가능한지 질의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영사관측의 답변은 ‘불가’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신분’인 총련계 동포들의 고향방문은 허용해도 대한민국 국적의 한통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통련이 지은 ‘원죄’가 무엇이기에 민족화해의 햇살은 그들을 비껴가는 것일까. 광동의 의장과의 인터뷰는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시작됐다.

총련은 가능해도 한통련은 ‘방문불가’

—남북정상회담 후 고국방문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을 텐데 한통련은 여전히 ‘입국불허’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광경을 일본 땅에서 지켜보면서 이제야말로 민족통일의 이정표가 생겼구나 싶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사적인 남북통일선언을 이끌어낸 두 지도자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대목이 그동안 한통련이 주장해온 자주와 민족대단결 원칙을 천명한 것이기에 감회가 더욱 남달랐습니다. 우리에게도 반국가단체란 굴레에서 벗어나 수십 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고 친지들을 만날 기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볼 따름입니다.”

—한통련의 경우 전신인 한민통이 1978년 ‘김정사 간첩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란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역대 한국 정부는 한통련이 총련과 연계된 친북조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사건은 한마디로 중앙정보부의 자작극이었습니다. ‘한민통 회원으로 간첩 활동을 했다’고 진술한 김정사라는 사람은 한민통 회원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간첩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그 사람이 6개월만에 일본으로 돌아와 활보하고 다닌 것만 봐도 진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박정희 독재정권이 한민통 의장으로 추대돼 있던 김대중씨를 궁지에 몰아넣고 해외에서 터져나오는 유신독재 타도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모략이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사에서 펴낸 『김대중 납치사건의 전모』를 보면 1973년 8월 8일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된 김대중씨가 한민통 초대 의장에 내정돼 있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당시 한민통과 김대중씨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1972년 10월 유신 당시 디제이는 신병치료차 일본에 와 있었습니다. 유신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이것은 총통제 음모다, 나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서 유신반대 투쟁을 벌이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디제이는 일본 내 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신철폐 투쟁에 적극 나섰던 민단 내 개혁파들과 디제이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됐죠. 디제이는 이들 중 대표격인 김재화(민단 단장 출신으로 8대 신민당 전국구 의원에 당선됐으며 유신선포 당시 국회 외무위 소속으로 주일대사관 국정감사중 한국으로 가지 못하고 일본에서 박정희정권 타도운동을 전개), 배동호 선생 등과 만나 유신독재 타도투쟁을 위한 일본 내 조직결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그 조직이 1973년 8월 15일 결성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한민통)입니다.”

한통련과 김대중

하지만 8월 5일 디제이와 김재화, 배동호 선생 등이 참석한 5자 회동에서 ‘박정희 독재타도, 해외동포 단결, 영구분단 음모분쇄’ 등의 행동방침을 결정하고, 의장으로 김대중씨를 추대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8월 8일 이른바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8월 3일 ‘김대중 납치를 위해 중앙정보부 특수공작반이 움직이고 있다’는 유력한 제보가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디제이의 숙소를 급히 도쿄 그랜드 팔레스호텔 22층으로 옮겼죠. 이때 디제이는 ‘일본에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겠는가’며 옮기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기도 했죠. 디제이는 팔레스호텔에 가셔도 우리가 배치한 경호원들을 ‘모두 로비로 내려가라’며 돌려보냈는데, 결국 우리의 이동을 눈치채고 이미 22층 옆방에 대기중이던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당한 겁니다.”

당시 경호원으로 배치해둔 후배로부터 ‘김대중 선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간 과 의장은 디제이의 방에서 독한 마취냄새가 나고, 그 옆방에서 권총탄환 2개와 피묻은 휴지, 배낭, 비닐 박스와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이프를 발견하고는 아찔했다고 한다.

“순간 박정희가 디제이를 죽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곧바로 기자회견을 소집했죠. 근데 회견장에 온 일본 기자들이 디제이를 잘 몰라요. 마침 디제이가 일본의 야스에 로스케 교수와 대담한 기사가 『세카이(世界)』지 8월호에 게재됐는데 급히 50권을 사다 회견장에 뿌렸습니다.”

다음 날인 9일 즉각 ‘김대중 선생 구출투쟁위원회’를 결성해 납치범이 중앙정보부 특수공작원임을 폭로했다고 한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한민통 결성식은 거행됐다. 그 결성식장 한가운데에는 태극기와 함께 디제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디제이가 1980년 5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됐을 때 가장 큰 혐의가 ‘반국가단체 수괴’였죠. 반국가단체란 바로 한민통입니다. 그 때문에 디제이는 사형선고를 받았고, 우리는 김대중씨 구명운동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본 내 지식인들을 동원해 각종 규탄대회를 열고 한국정부는 물론 일본정부에까지 압박을 했죠. 당시 우리는 디제이야말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이룰 가장 탁월한 지도

자라고 여겼고, 그의 구출 투쟁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제일 과제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한민통 활동의 대부분은 디제이와 연관됐다. 하지만 한민통 사건의 피해 당사자격인 디제이는 한민통 문제에 대해 여전히 ‘침묵’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당선 후 일본을 방문했을 때, 디제이는 자신의 구명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일본인들은 만찬회에 초청했지만 한통련은 철저히 배제했다.

“디제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김대중 구출·구명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일본인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곽 선생, 당신들 고생도 다 끝났소. 이제 금의환향할 일만 남았군요.’ 그동안 국민의 정부가 보수파에 둘러싸인 소수파 정권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이해해왔어요. 하지만 총련 동포들도 고향을 찾을 수 있게 된 마당에 여전히 우리 문제를 뒤로 밀쳐두기만 한다면 그건 의리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디제이가 진정 통일의 기반을 닦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려면 먼저 우리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대목에서 곽 의장은 담뱃불을 붙였다. 그리곤 한참 동안 사색에 잠겼다.

민단 자주화운동의 선봉에 서다

곽동의 의장은 경남 남해가 고향이다. 일제시대에 살 길을 찾아, 혹은 징용으로 일본에 건너왔던 대개의 재일동포 1세대와는 달리 그는 해방 후인 1948년 일본 교토로 유학을 왔다. 대학 2년 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에 지원했던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좌익’ 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물이다. 다만 일본주둔 미군 소속으로 참전한 전쟁에서 자신들을 머슴 부리듯 대하는 미군의 차별대우에 분개해 단식투쟁으로 맞섰을 만큼 민족의식과 의협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독한 지휘관을 만났으면 총살감’이었을 단식투쟁 때문에 1951년 2월 그는 일본으로 되돌려 보내졌다. 함께 일본으로 돌아온 당시 민단 단장 아들의 권유로 그는 민단 중앙에서 조직차장으로 일했고, 민단 내 청년단체들이 대한청년단으로 통합될 때 조직국장을 맡았다.

한편 해방 후 처음으로 출현한 재일동포 단체는 1945년 10월 재일동포의 귀국문제와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결성된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이었다. 뒤를 이어 우익 성향의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이 결성돼 조련과 대립관계에 놓이기도 했다. 이후

모스크바3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을 둘러싸고 조련 내 반탁파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 신조선건설동맹을 결성했는데 이것이 1946년 10월 결성된 재일본조선거류민단(민단)의 전신이다. 그후 조련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로 개칭돼 북쪽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로 남게 된다.

1950년대 이후 민단 청년단체의 중심간부로 활동한 곽 의장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주목받았다. 당시 청년단체란 대부분 주먹패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그러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에게는 어느 주먹패들과는 다른 품모가 있었다. 1958년 대한청년단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그는 비리투성이 깡패조직의 이미지를 뜯어내고 대한청년단을 애국적, 민주적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나갔다. 특히 4·19 혁명 당시 고국에서 벌어지는 반독재투쟁에 적극 호응했고, 대한청년단의 조직명칭(이승만이 지음)을 ‘재일한국청년동맹’ (한청, 현재는 한통련 산하단체)으로 개칭하는 등 반이승만 노선을 분명히 내세웠다. 이때 그의 나이 30세였다.

독재정권에 빌붙어 어용의 길을 걷던 민단 상층부와의 대립은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곽 의장을 중심으로 한 민단개혁파들은 ‘민단정상화 유지간담회’를 결성해 민단의 자주권 수호를 내걸고 정권의 노골적 간섭에 맞서 나갔다.

“한통련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 정부의 민단 어용화 음모는 노골화됐습니다. 일제시대 검사출신으로 일본 내에서 황민화 운동에 앞장섰던 단체인 해파회 지도부장을 역임한 권일이라는 사람이 민단 단장이 돼 군사정권에 충성을 맹세했죠.”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67년 공화당 전국구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권일은 곽 의장을 민단 내에서 몰아내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고 한다. 민단의 사주를 받은 깡패들의 테러와 사무실 습격이 빈번히 일어났고, 영사관 직원들까지 동원돼 집요한 회유공작이 들어왔다. 또 돈으로 한청 회원을 매수해 “곽동의가 공공연히 이복을 지지했다”는 ‘양심선언’을 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한일협정과 삼선개헌 문제를 거치면서 유지간담회를 중심으로 박정희정권 반대투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결국 1971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민단 단장선거에서 개혁파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주일대사관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재곤이란 공사관이 유세장에 나타나서 ‘민단 간부 중 조총련과 관계를 맺고 간첩행위를 한 증거가 지금 테이프에 녹음돼 있다. 선거가 끝나면 곧 공개하겠다’며 떠들었던 거죠.”

“우리는 결코 조국을 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민단을 격렬한 내분에 휩싸이게 한 일명 ‘녹음사건’이었다. 그 공사관이 겨냥한 사람은 당시 개혁파 후보로 출마했던 진영의 참모들. 냉전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던 시절인지라 공사관의 ‘간첩’이란 말 한마디에 선거는 역전됐다. 하지만 선거 후 공개하겠다고던 테이프는 그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최대의 사기극’이었던 셈이다.

테이프의 실체를 밝히려는 요구에 민단의 어용간부들은 곽 의장을 비롯한 개혁파들을 제명시켜버렸다. 군사정권의 비호 아래 동포들을 대상으로 비자업무 등을 대행했던 민단에서 제명되는 것은 곧 한국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가 소멸됨을 의미했다. 무국적 아닌 무국적 상태. 이때부터 그에게 ‘반정부인사’라는 딱지가 붙기 시작했고, 한민통에게도 ‘반국가단체’란 올가미가 덧씌워진 것이다.

한민통은 1989년 한통련으로 전환하면서부터 해외동포들의 조국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근거지가 되어갔다. 일본에서 온갖 차별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동포사회 내에서 민족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곧 민족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범민련 해외본부 결성을 주도하는 등 해외동포들의 통일운동을 선구적으로 개척해온 곽 의장은 1990년 1차 범민족대회 당시 해외교포 참가단장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이북을 방문한 것을 가지고 ‘거 봐라, 곽동의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정부에서 말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북 방문 때 북측 관계자들로부터 ‘김대중씨가 어떤 인물이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통일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남쪽 지도자’라고 답해주었죠. 그 말이 꼭 10년 후 현실로 됐습니다.”

고희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 않은 체력과 열정으로 한통련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곽동의 의장. 하지만 수십년간 한결같이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갈망해온 그에게 조국은 여전히 ‘반국가단체 수괴’란 딱지를 붙여두고 있다. 군사독재에 맞서 투쟁했던 고국의 투사들은 지금 모두 명예회복을 받고 장관으로, 국회의원으로 활동중임에도. 한국 국적을 가진 그에게 조국은 언제까지 유배 생활을 요구할 것인가. 그러나 곽 의장은 말한다.

“조국은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는 결코 조국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월간 말 2000년 10월호 기사)

자료 5

<자료5—유럽동포운동의 뿌리와 역사를 찾아서 (1) >

“민주화와 통일 여정에 바친 청춘,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망명객’”

지난 10월호 재일 한통련 취재에 이어 월간 「말」은 11월 20일부터 유럽지역 동포운동의 뿌리와 역사를 찾아 19박20일 동안 유럽 현지취재에 나섰다. 1960년대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학생들과 ‘경제중흥의 임무’를 띠고 비행기를 탄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유럽인들의 차별정책에 맞서는 과정에서 이들은 민주적 권리에 눈뜨고, 때마침 유신이 선포되면서 광포한 독재정치가 극에 달하자 기꺼이 조국민주화의 깃발을 유럽에서 올렸다. 이 와중에 ‘정지망명’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던 이들은 30~40년의 망명가를 가슴에 묻은 채 어느 새 초로반백의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아올 수 없는 조국. 새로운 세기와 더불어 한반도에도 해방의 물결이 넘쳐나고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높아졌지만, 이들에게는 오늘도 냉전과 분단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독일의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쾰른과 뒤스부르크, 보훔으로, 프랑스의 파리로, 스위스의 제네바로, 다시 독일의 뮌헨과 베를린으로... 기나긴 여정은 덴마크 코펜하겐을 거쳐 스웨덴 스톡홀름에 이르러서야 끝이 났다. 총 19박20일. 유럽 내 이동거리만도 6천여km.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나선 유럽기행. 그들은 월간 「말」 취재진의 뜻밖의 방문에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뜨겁게 맞아주었다.

군사정권의 광풍이 몰아치던 1970~80년대 시절. 폭정에 짓밟히던 조국의 동포들을 대신해 군사정권의 만행을 세계에 알려 국제여론을 움직였고, 구속·수배·의문사당한 조국의 동지들을 위해 아낌없이 연대하고 지원했던 사람들. 그러나 30~40년 세월 속에 남은 것은 '망명객' 처지일 뿐이다. 그동안 두 차례나 민간정부가 들어서고 세기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금기의 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돌아갈 수 없는 조국을 향한 그리움이 잊혀질 날 있었으랴.

그러나 그들은 말한다. 단지 "정당하게 평가받고 싶다"고. '반체제인사' '친북인사' 심지어 '북한공작원'이란 낙인마저 감수하며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이역만리에서 모든 것을 바친 자신들의 활동이 "조국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길 바랄 뿐"이라고….

동백림 사건

"중앙정보부는 8일, 주로 과거 구라파에서 유학한 바 있는 현역 대학교수와 현재 유학중인 한국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무려 1백94명이 관련된 대규모 간첩사건을 적발, 이를 수사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사건' 제1차 진상발표문에 따르면 이들이 1958년 9월부터 1967년 5월 사이에 동독주재 북괴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접선, 간첩활동을 해왔으며… (후략)" (1967년 7월 8일 『동아일보』 기사)

그것은 마흔하늘에 날벼락과도 같았다. 마치 첩보작전이라도 감행하듯 박정희 군사정권은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독일로 급파, 독일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을 유인, 납치해 서울로 압송했다. 음악가 윤이상 선생 부부와 화가 이응로 선생 부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학 연구원 정규명 박사 부부 등 독일사회에서도 널리 알려진 예술가, 학자 16명이 행방불명됐다가 며칠 뒤 서울에서 간첩으로 세상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우선 독일언론이 발칵 뒤집혀졌다. "한국의 정보원들이 독일에 와서 정권비판적인 한국인들을 납치해갔다"는 기사가 독일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동백림 간첩단사건.' 그러나 박 정권은 연행해온 이들이 동베를린(동백림) 주재 북한대사관을 드나들면서 간첩행위를 해 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끝내 이들에게 사형, 무기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65년 한일협정 반대시위 후 확산되는 반정부투쟁을 잠재우고, 3선개헌으로 가는 길목에서 정적들을 옹아매기 위한 방편이었다. 해외에서 거의 무방비상태로 있던 관련자들에게 덧씌워진 '간첩' 혐의는 특히 국내 반정부세력에 대한 '위력시위' 로는 효과만점이었다. '동백림 사건' 을 필두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등이 줄줄이 이어졌고, 정국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경색돼갔다.

'동백림 사건' 의 핵심요지는 사건 관련자들이 동독의 북한대사관을 드나들면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보부의 이러한 발표내용은 진실인가. 1950년대 후반부터 하나둘씩 생겨난 유럽의 한국유학생들은 1960년대 중반부터 그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중 서베를린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의 경우 당시 서독주민들이 큰 제약 없이 동베를린을 드나드는 것을 보면서 호기심에 동베를린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 일부는 같은 민족이란 '감상적' 생각에 동베를린의 북한대사관을 방문해 직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통일을 주제로 토론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간첩행위'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침소봉대였다. 동독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고 나아가 이념적으로도 접촉할 수 있는 자유까지 보장된 서독에서 유학생활동을 하던 그들이었기에 별다른 판단 없이 북한사람들을 만난 것, 이것이 실상의 전부였던 것이다.

'동백림 사건' 은 한국과 서독정부 사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독정부는 자국내에서의 강제연행을 명백한 주권침해로 규정했고, '납치' 해간 16명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국교를 단절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하고 나섰다. 당시 외무장관 셸이 이러한 서독정부의 방침을 가지고 서울을 방문해 한국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한국정부는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난 1969년, 사건 관련자들을 '추방' 형식으로 서독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후과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다. 서독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나빠진 데다가 사건 당시 서독 대사로 있으면서 '동백림 사건' 에 대해 본국에 항의했던 최덕신씨가 이 과정에서 결국 망명해 정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유럽동포운동의 씨앗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뿌려졌다고 할 수 있다. 실체조차 불분명했던 '동백림 사건' 을 겪은 뒤 독일의 유학생과 교포들은 박정희 정권 반대투쟁을 본격화했고, 1974년 3월 1일 유신독재 반대와 민주주의 회복을 내걸고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동백림 사건' 관계자들이었다.

‘경제중흥’ 임무 안고 떠난 광부와 간호사

유럽동포운동의 역사와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유럽동포사회 구성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일제시대 살 길을 찾아 현해탄을 건넜다가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주축이 된 일본동포사회나 1965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 후 대폭 늘어난 이민자들로 본격 형성된 미국동포사회와 달리 유럽지역은 나라마다 이민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기에 동포사회가 존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유학생들이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하나둘씩 늘어났지만 그 수는 1960년대 초반까지 1백 명도 채 되지 않았다. 동포들의 유럽 이주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다. 제3공화국 당시 소위 ‘근대화 공업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력수출이 외화획득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특히 서독지역에 광부, 간호사 노동자들의 파견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호위 아래 1950~70년대 ‘라인강의 기적’ (이 기적에는 물론 ‘한국전쟁에 따른 호황’도 일익을 담당했다)이라 불릴 만큼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서독은 이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가스트 아르바이터’ (외래노동자)란 이름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수입하기 시작했다. 서독은 1963년 한국정부와도 특별고용계약을 맺고 그해부터 광부 노동자를 수입했고, 1966년부터는 간호사 노동자도 받아들였는데 그 수는 1970년대 초반 3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박 정권 초창기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다. 원조와 차관에만 의존한 채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닦아나가는 것에 소홀하다 보니 실업률만도 30%에 달했다. 박 정권은 이 문제의 해결을 ‘인력수출’을 통해 찾았다. 당시 ‘한국인력수출공사’와 서독 ‘루르지방탄광업협회’의 계약에 따라 파독된 광부들의 70% 이상이 고졸자였고, 30%가 대졸 혹은 대학 중퇴자였다. 그중에는 국회의원, 변호사, 교사 출신 등도 포함돼 있었다니 그만큼 실업문제가 심각했음을 드러내준다 하겠다.

독일노동자를 대신해 라인강 인근 루르 지방 일대 탄광지대의 지하 1천2백m 막장에 투입된 이들은 원래 광부출신이 아니었다. 생전 처음 하는 고된 채탄작업이 손에 익을 리 만무했을 테니 자연 재해와 사고(심지어 작업 도중 사망하는 경우도 허다했다)에 시달려야만 했다. 하지만 한국영사관은 오히려 재해를 당한 노동자를 속히 한국으로 이송하는 데에만 신경 쓸 뿐, 이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옹호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특히 동백림 사건 후 한국정보기관의 감시가 일상화되면서

노동자들은 더욱 위축됐다. 중앙정보부는 광부들 내에 정보요원을 침투시켜 이들을 끊임없이 감시했고, 노동자들의 합숙소에 상주하는 일도 허다했다. 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노동자들을 즉시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광부노동자들의 주장대로 ‘한국정부는 늘 독일정부와 기업주 편’이었던 것이다.

간호사들의 근로환경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 정식 간호대학이나 전문학교를 마치고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독일에 도착했을 때, 주어진 일은 병원 허드렛일이었다. 독일은 의학수준도 높고 보수도 많다는 말만 듣고 기대를 잔뜩 안고 왔는데, 하루 3교대로 침대시트와 환자복을 빨고 병실, 화장실 청소와 덩치 큰 독일환자 수발 등 온갖 굵은 일만 도맡았던 것이다. 정부가 독일의 간호사와 미국식 교육을 받은 한국의 간호사간의 역할 차이—당시 독일의 간호사는 주사를 놓거나 환자상태를 체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일절 할 수 없는 단순 간호보조원으로 주로 교회 수녀들이나 봉사원들이 맡아왔기에 근로조건이나 보수가 최하층이었다—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무작정 사람만 보낸 결과였다.

특히 광부와 간호사들 중에는 독일로 나올 때 비행기 샅을 아끼기 위해 당시 한 해 수천 명씩 유럽 각국으로 ‘팔려’ 가던 입양아(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 총 10만 명 이상이 ‘팔려’ 갔다고 한다)들의 인솔자 역할을 하던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입양아와 해외파견노동자, ‘외화획득’을 빌미로 군사정권에 의해 버려진 우리 민족의 슬픈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동포여! 민주사회건설의 동지여! 사회구조의 모순과 국가의 위기를 철저히 인식하라! 민족의 굴욕적인 예속이 다시 오기 전에, 국민이 영구히 한 독재자의 노예로 되기 전에, 수수방관적 자세를 버리고 일어나서 이성과 양심을 거스른 독재의 무리들을 물리치자! 빼앗긴 국민주권과 짓밟힌 인권을 회복하여 민족의 이념인 민주사회를 창건하는 데 헌신하며 참여하자!” (1974년 3월 1일 발표된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선언서」 중)

1974년 3월 1일 독일의 수도 본 시의 중앙 베토벤광장. 3·1절 55주년을 기념해 독일동포들 중 박정희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독일의 사회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연대한 이날 집회에서는 55명이 대표로 서명한 선언서가 낭독되고, 본 시내 가두행진도 거행됐다. 독일사회 내에서 진행된 동포들의 최초 공개시위. 독일 내에서 본격적인 반유신·반독재민주화운동의 막을 연 이날 집회는 최초의 유럽동포운동단체인 민주사회건설협의회(이하 민건회, 회장 정규명)의 출범을 알리는 행사이기도 했다.

당시 독일의 동포운동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첫째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운동흐름이다. 1960년대 이후 유학 온 사람들 중에는 대학시절 4·19 혁명과 6·3 투쟁을 거치면서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독일 땅에서도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자체 토론모임을 통해 반독재민주화의식을 고양시켜나갔다. 유신체제 출범 후 이들은 박정희 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했고, 독일사회 내 진보단체들과도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했다.

둘째는 독일기업의 불합리한 처사에 반발하던 광부, 간호사 노동자들의 움직임이다. 당시 광부들의 경우 고된 막장일에 재해를 입어도 호소할 곳이 없었고, 하루 이틀만 결근해도 해고장이 날아오는 상황이었다. 간호사들 역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귀국을 요구하는 등 비인간적 처우문제가 심각했다. 게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독일정부와 기업이 한인노동자들의 채용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 강제귀국 조치를 내리자 이에 맞선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셋째로는 광부, 간호사들과 적극 연대했던 한인교회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당시 독일에 진출한 한인교회는 동포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였는데, 이중 진보적인 교회에서 한인노동자들의 권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던 것이다.

독일사회 내의 차별대우에 맞서, 또 한국의 독재정치에 대한 분노감으로 행동했던 이들은 정보기관의 극심한 감시와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포운동은 필연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최초의 조직이 바로 민건회였던 것이다.

본격화되는 반독재민주화운동

민건회 출범은 유럽동포운동의 급속한 발전을 이끌어냈다. 독일의 '성공'은 즉시 다른 나라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프랑스와 스위스, 덴마크를 비롯한 북부 유럽에서도 반독재민주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고, 민족문제연구소(프랑스, 소장 이희세), 민주사회건설협의회(스위스, 회장 최기환), 북구민족민주운동협의회(덴마크, 회장 임민식) 등이 속속 결성됐다. 독일 내에서도 1975년 광부 중심의 재독한

인노동자연맹(노연, 위원장 이종현)이 결성되었고, 1976년에는 간호사들이 중심이 된 재독한인여성모임이 각 지역에서 꾸려졌다. 또 한인노동자들의 문제와 조국의 민주화운동에 적극 연대하고자 했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1980년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기통회, 회장 이화선 목사)가 결성되기도 했다.

이로써 유럽동포운동은 노동자, 유학생, 종교인을 주축으로 지역과 계급·계층을 뛰어넘는 본격적인 연대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또 1977년 5월에는 일본의 한민통 및 미주지역의 동포운동단체와 연대해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연합(한민련, 유럽본부 의장 윤이상)을 결성하는 등 해외동포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나갔다.

1970년대 유럽동포운동과 관련해 주목해볼 점은 당시 운동주제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영역을 넘어서서 '변혁적 관점'을 뚜렷이 가져나갔다는 점이다. 68운동의 바람이 휩쓸고 간 뒤의 유럽 좌파운동에 영향을 받기도 한 이들은 모든 정보가 차단된 국내와는 달리 외신을 통해 접하는 고국소식을 토대로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 나갔다. 당시 유럽동포운동 내에서 발간한 잡지 『주체』(발행인 정철제)—1974년부터 1978년까지 계간지 형태로 총 15호를 발행했는데, 제호 때문에 오해와 탄압을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진보매체다—의 내용을 보면 마르크스주의와 종속이론에 대한 소개, 반미자주화 문제와 연방제통일 문제 등 당시로서는 상당히 선진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과 내부의 치열한 토론은 때론 분열과 분파라는 부정적 효과도 낳았지만 유럽동포운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공헌했다.

또한 이들은 독일언론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분노 속에 술한 눈물을 흘렸고, 전두환 정권의 폭정에 얼어붙은 조국의 동지들을 대신해 유럽사회에 광주학살의 진상을 널리 알리려나갔다. 이 과정에서 유럽동포운동은 유럽 각 나라 사회당을 비롯한 진보단체들과의 연대에도 힘을 쏟았는데, 특히 세계사회민주당(Socialist International)으로부터 국제 당대회 때마다 초청받는 등 유럽 진보세력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한편 유럽동포운동의 활약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 있다. 바로 김대중씨 구명운동이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김대중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먼저 들고일어난 것은 해외동포들이었다. 얼어붙은 정국 아래 한국의 지식인들과 운동가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때, 이들은 각 나라 국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술한 정당과 단체들을 찾아다니며 김대중씨의 석방을 호

소했다.

“김대중을 구출하라”

그 과정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외국정당의 행사가 있는 날에는 윤이상, 정규명, 최기환, 이희세씨 등 유럽동포운동의 지도자들이 직접 행사장 로비와 숙소 호텔입구에서 관계자를 붙들고 호소하는 일이 허다했다. 특히 유엔인권위원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매일같이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각 나라의 정당과 단체들이 김대중씨 석방을 위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SI와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등에서는 공개적으로 한국정부를 규탄했고, 각국 정부도 전두환 정권의 만행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1970년 서독총리로는 최초로 동독을 방문해 동·서독 교류의 물꼬를 튼 뒤 1972년 11월 동·서 조약을 체결했던 독일사회당 브란트 총리의 경우 한국 정치 상황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유럽동포운동을 후원해 큰 힘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김대중씨 구명운동은 유럽동포운동의 양적·질적 발전을 이룬 원동력이 되었다. 우호적 지지자들이 대거 운동에 뛰어들었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흔쾌히 털었다. 유학생들은 하던 공부를 뒤로 밀쳐두고 통역과 번역, 각 나라 말로 유인물을 제작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다. 종교인들도 유럽의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한국 정치상황에 관심 가져 줄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활동은 조직의 확대로도 이어졌다. ‘베를린 노동교실(회장 윤운섭)’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본부(대표 김대천)’ 등이 결성됐고, 원풍모방, 동일방직 분규를 지켜본 ‘재독한인여성모임’ 회원들은 한국여성노동자 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다. 또 문부식, 김현장씨의 미문화원 사건을 계기로 ‘양심수후원모임’이 결성돼 구속된 조국의 동지들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또한 매년 ‘오월민중제’와 ‘갑오동학농민제’ 등 다양한 대중행사를 개최해 유럽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독일지식인들과 연대해 ‘한독문화협회’ ‘한국학술연구원’ 등을 결성, 한국의 정치현실은 물론 한국문화와 역사를 알려나가는 데에도 힘을 썼다. 이러한 성과는 1987년 재유럽민주한인협의회(유럽민협, 1989년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로 개칭, 의장 윤이상) 결성으로 모아졌고, 유럽민협은 이후 유럽동포운동의 연대조직으로 우뚝 섰다.

이 시기야말로 유럽동포운동의 전성기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정부로부터 ‘반체제인사’ ‘친북인사’ 심지어 ‘북한공작원’이란 낙인이 찍혀야만 했다. 게다가 시시각각 조여드는 정보기관의 압력과 협박 속에 이들이 결국 ‘정치망명’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것은 이 시기의 아픈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유럽에서 타오른 통일의 불꽃

1990년 11월 19일, 유럽동포운동가들은 이날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다. 바로 독일 베를린에서 남·북·해외 대표들이 모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을 결의한 날이기 때문이다. 1988년 남쪽 인사 1014인의 ‘통일선언’과 1989년 1월 결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범민족대회 제안을 시작으로 남과 해외의 운동가들은 본격적인 통일운동에 나섰다. 비록 1990년 1차 범민족대회가 남쪽 정부의 반대로 분산개최됐지만 범민족대회 후 이들은 상설적인 범민족통일운동체 결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나갔다. 그 결과 남·북·해외의 대표들이 독일 베를린에 모여 역사적인 범민련 결성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범민련 결성은 해외동포운동의 방향을 조국통일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민주주의에 눈뜨면서 점차 한국 독재정치의 뿌리에는 분단과 반통일의 역사가 놓여 있음을 깨달았던 해외동포운동가들은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가교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특히 유럽동포운동은 1970년대 이미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토론했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모색했고, 나아가 분단 후 최초로 해외동포들과 북쪽 인사들간의 만남을 성사시킨 바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기통회)가 개최한 ‘통일대화’이다.

1972년 냉전체제를 허문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과정에는 동서의 냉전과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독일기독교자들의 역할이 컸다. 분단의 장막을 넘나든다는 의미에서 ‘그랜츠갱어’라고 불린 그들은 독일이 분단된 날부터 쉬지 않고 동·서독을 왕래하면서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전통적인 원수관계를 공존과 대화관계로 탈바꿈시켜왔다. 그들의 인상적인 활동에 주목한 한인기독교인들은 한반도의 ‘그랜츠갱어’가 되길 희망했다. 1980년 이화선, 이영빈 목사를 주축으로 기통회를 결성한 이들은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화해, 나아가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추구했다. 그 결과 1981년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분단 후 최초로 ‘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 신자간의 대화’를 개최했던 것이다.(이 행사에 북측 대표로 나온 사람은 조선기독교연맹의 허정숙, 김득룡, 염국렬씨와 조국평

화통일위원회의 전금철, 여연구씨 등이다.)

1986년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된 '통일대화' 추진과정은 말 그대로 가시밭길이었다. 애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차대회 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 제네바에 사무실을 둔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에 집단적으로 몰려와 WCC의 '통일대화' 인정에 대해 '항의데모'를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장소가 오스트리아 빈으로 변경되는 일도 있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큰 역할을 했던 KNCC조차도 분단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던 시절의 슬픈 초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유럽의 통일운동은 한국의 민간통일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에는 유럽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따랐다. 1989년 7월 전대협 임수경 대표의 방북을 비롯해 연이은 전대협, 한총련 학생들의 방북도 유럽동포운동의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당시 임수경씨가 일본을 거쳐 베를린에 왔을 때, 안기부의 추적을 따돌리고 임씨를 조선민항에 태워 평양으로 '입성' 시키는 데 성공한 것도 바로 유럽동포운동조직이었다.

분열과 침체, 그리고 상처들

하지만 뒤이어 위기가 닥쳤다. 그 위기의 근원에는 역설적이게도 범민련이 있었다. 역사적인 범민련 결성을 이끌어낸 유럽동포운동이었지만 그 활동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해외범민련 결성 초기부터 "범민련 활동이 유럽지역의 조건과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본동포운동 조직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내부에 이북사회에 대한 인식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게다가 1970~80년대에는 해외동포운동이 국내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것과는 달리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양적, 질적으로 발전한 국내운동에 의해 해외동포운동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다보니 범민련을 둘러싼 국내운동의 분열이 그대로 해외동포운동에 투영돼 해외범민련의 분열을 촉진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1995년 11월 유럽동포운동의 대표적 지도자였던 윤이상 선생이 서거하고, 정규명 선생(유럽 범민련 초대의장)도 병마에 시달리면서 중심을 잃은 조직의 분열은 더욱 확산됐다.

유럽동포운동의 분열에는 또한 안기부의 치밀한 정치공작도 크게 작용했다. 1990

년대 유럽동포운동은 '프락치 노이로제'에 시달릴 만큼 프락치 사건이 빈발했다. 분열과 대립의 틈을 뚫고 들어온 이들은 20대 유학생에서부터 60대 좌익활동가까지 신분이 다양했다고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차아무 교수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지방 C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해직된 민교협 간부 출신의 차교수(국가보안법 관련 책자를 펴냈을 만큼 진보적인 교수로 알려져 있다)가 독일에 온 것은 대략 1994년 전후. 그는 오자마자 동포운동가들을 만나 "범민련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의 국내활동과 명성을 의심치 않았던 동포운동가들은 그를 범민련 핵심간부로 임명했고, 독일생활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차교수가 결합한 뒤 유럽범민련은 급격히 좌편향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뛰어난 말솜씨와 필력을 갖춘 차교수는 이를 교묘히 합리화하면서 반대세력들을 개량주의, 기회주의로 몰아부쳤고, 이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범민련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차교수의 정체가 드러난 것은 1998년. 당시 베를린 주재 북한 대표부의 차아무 참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차참사는 다름 아닌 유럽 범민련의 북쪽 상대자였다. 그런데 차참사와 비공식적으로 관계를 맺어왔던 차교수가 차참사의 망명과 함께 범민련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디스켓을 들고 사라져버렸다고 한다.(현재 차교수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적인 사태를 접한 동포운동가들은 그때서야 차교수가 안기부와 관계 맺고 유럽범민련을 와해하기 위해 독일에 왔으며 북측 간부의 망명사건에도 깊숙이 개입된 것을 확인했지만, 범민련 유럽본부가 입은 상처는 이미 회복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중단했고, 인간관계도 여지없이 파괴돼버린 것이다.

유럽취재 도중 만난 많은 동포운동가들은 분열의 틈으로 파고든 이같은 파괴공작의 후과 앞에 모두들 힘들어했다. 서로가 서로를 믿기 힘들게 된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 상처가 아물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1960~70년대에 20~30대의 나이로 유럽에 왔던 동포운동가들은 지금 모두 50~60대의 초로반백이 되었다. 정치망명의 길을 택해 지금은 대부분 현지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들 중에는 체류연장을 위해, 혹은 국적 취득을 위해 현지사람과 결혼해 가정을 이룬 사람도 많다. 1970년대에 장기체류를 허가받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현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취업 당시 3년 계약으로 왔던 광부노동자들은 택시운전사나 혹은 식당, 여행사

운영 등으로 생계를 잇고 있다. 또 현직에서 은퇴하고 연금에 의지해 생활하는 이들도 많았다. 자식들은 성장해 대부분 대학을 다니거나 결혼해 나가 살고 있었다. 하지만 젊은 시절 번 돈을 모두 조국민주화운동에 쏟아붓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다들 힘에 부친 상태였다.

다시 통일조국을 향하여

그러나 민족애와 통일조국을 향한 이들의 신념은 꺾일 줄 모른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뒤로는 범민련 활동의 아픔을 딛고 유럽동포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전망을 준비하려 애쓰고 있다. 물론 그 길은 이제까지 걸어온 길보다 더 험한 길인지도 모른다. 활동력이 크게 감소된 나이도 그렇고, 두 번의 민간정부 출범 후 여러 사람들이 결국 입국을 선택해 활동가들의 수도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장기적인 유럽동포운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2세들에 대한 민족교육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늙고 병든 자신들이 젊은 시절 그토록 매달리며 지키고자 했던 민족의 혼과 얼, 통일에 대한 신념들을 자식들이 직접 느낄 수 있을 때, 동포운동의 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족학교와 문화모임 결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베를린의 '세종학교' (민족학교, 교장 김종한)와 '천동소리' (풍물모임, 단장 최영숙), 보훔지역의 '한국민중문화모임'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19박20일의 유럽취재 기간 동안 기자는 이들을 만나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속 깊이 울음을 삼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망명객 처지로 겪었던 고초와 고국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감출 것 없이 기자에게 표현해올 때, 가슴 저미는 아픔도 느꼈다. 과연 이들은 고국의 품에 안길 수 없는가. 무엇이 이들의 고국방문을 가로막고 있는가.

<월간 말 2001년 1월호>

자료 6

<자료 6—유럽동포운동의 뿌리와 역사를 찾아서 (2)>

망명객 아픈 가슴마저 가로지른 분단선

“분단의 경계선 앞에 주저앉고 침묵하기보다는 경계를 넘나들며 온전한 민족을 꿈꾸었던 유럽의 동포운동가들. 역사의 물줄기에 기꺼이 한 몸 던진 이들 ‘망명객’에게 이젠 조국도 품을 잃 때가 되지 않았다. 무너지는 분단장벽 너머로 통일의 새 기운이 옹터가는 오늘, 그들의 묻혀진 역사를 여기 공개한다.”

원자폭탄 개발 ‘특명’ 받고 떠난 독일유학 길

‘지독한 구두쇠’, 그러나 모두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청빈한 학자’ 안석교 박사(73)는 20년은 족히 됐을 늙은 외투차림이었다. ‘저런 차가 어떻게 굴러갈까’ 싶을 만큼 구식인 그의 차를 타고 30년째 살고 있다는 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동포운동가들의 지적이 실감났다. 벽마다 책이 가득한 두 칸짜리 좁은 아파트에 들어서니 20~30년씩 된 가구와 생활도구들이 손님을 맞았던 것이다.

9남매의 맏이로 아직도 아흔이 넘은 노모가 한국에 생존해 있는 안 박사는 전쟁 직후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해 대학원까지 수석으로 졸업한 인물이다.

“전쟁통에 7명의 교수 중 6명이 월북했죠. 그러니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어요? 유일하게 남은 교수도 강의시간 내내 말 한마디 없이 일본 책만 베끼다 나갔으니까요. 그 교수는 백묵가루를 하도 많이 마셔 결국 폐병으로 숨졌죠.”

독학으로 공부하며 후배들 공부까지 돌봐야 했던 안 박사는 대학원 시절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저명한 물리학 교수가 쓴 교재의 오류를 지적해 편지를 보낼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고 한다.(이 교수는 답신을 통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그에게 박사과정 입학허가서를 보낸 바 있다.)

안 박사가 독일로 온 것은 1958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원자폭탄 개발을 염두에 두고 최고의 엘리트를 선발해 미국과 독일로 유학을 보냈다. 특히 안 박사는 독일정부의 국비장학생(DAAD)으로 선발돼 뮌헨공대로 유학을 왔는데, 한마디로 이승만의 '원자폭탄 개발' 특명을 띠고 온 셈이었다.(그와 대학동기인 프랑크 푸르트의 정규명 박사도 이 '특명'을 함께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우여곡절도 있었다. 보잘것없는 나라에서 유학 온 그의 실력을 교수들이 알아줄 리 만무한 것. 이에 안 박사는 말없이 프린스턴대 입학허가서를 내밀었다. 눈이 동그레진 독일 교수들은 그를 즉시 박사과정에 넣어주었다. 그것도 '불확정성의 원리'로 유명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 교수의 연구실이었다.

하이젠베르크 교수의 촉망받는 제자였던 그는 박사학위를 획득한 뒤 뮌헨공대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5년 동안 이론원자핵물리학을 강의했다. 하지만 뒤이어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다. 독일학계가 이 약소국 유학자에게 원자폭탄제조의 핵심기술분야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독일 최고의 이론물리학연구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는 전공을 수학으로 바꿔 바이에른주 아카데미 전자계산소 연구원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몇 해 전 정년퇴직했다.

동포운동과 관련해 안 박사는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기에 옆에서 도와줬을 뿐"이라며 자신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동포들은 알고 있다. 안 박사가 자신은 며칠씩 묵은 빵만을 사고 수십 년 된 낡은 옷과 가구로 생활하면서도 동포운동단체의 운영비와 간부들의 활동비를 책임져왔고, 동포운동과 관련된 일이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왔던 것을. 또 지난 1995년 이북이 물난리를 겪으면서 극심한 식량부족에 시달릴 때, 전재산을 정리해 20여만 마르크를 북에 기증한 사실도 있었다고 한다. 이제껏 동포운동 내에서 아무런 지위도 맡은 바 없지만 진정한 스승이자 애국자로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안석교 박사다.

뭘 물어봐도 그저 "난 별달리 한 게 없다"며 불고기만 잔뜩 권하는 그로부터 물리학과 수학, 철학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다가 늦은 밤 뮌헨 시내를 나

섰다. "유명한 뮌헨 맥주는 한잔 마셔야 할 것"이란 그의 제안에 들른 곳은 노이하우저 거리의 대형 비어하레(Bierhalle, 비어홀). 1천여 명을 수용한다는 그곳에서 우리는 프레첼(Pretzel, 테이블 위에 안주로 놓인 원형 모양의 구운 빵)을 안주 삼아 흑맥주를 마셨다. 30년 동안 알프스산맥 봉우리 천여 개를 올랐다는 '등산광' 안 박사의 다채로운 알프스 이야기도 곁들여...

재미있는 일화 한 가지. 서울대 재학 시절 김영삼씨와 친분이 있었다는 안 박사에게 1992년 대선 직후 한 동포운동가가 이야기를 건넸다.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됐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옛 친구를 이대로 두지 않을 거고, 한국에 한번 다녀오셔야죠?"

"그런 소리 말게. 한국은 끝났어. 이제 풀딱 망했어."

입국조건으로 반성문을 요구했던 '옛 친구'는 그의 예상대로 나라를 망쳐 먹었다.

"그람시를 안다고? 그럼 결혼을 허락하지"

"서울의 동숭동 캠퍼스는 어떻게 변했죠? 종로 거리며, 남산자락이며 지금도 옛 모습이 남아 있나요? 그러고 보니 벌써 40년이 넘었군요. 살아 생전에 돌아갈 수 있을지... 요샌 내 몸이 말이 아니에요. 작년에 위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서울 생각이 부쩍 잦아지네요."

스위스 제네바에 살고 있는 최기환 선생(72)은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20대의 나이에 중앙대 정치학과에서 조교수로 활동했던 그는 서울 토박이였다. 1년 전 위암수술로 현재 외출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그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했다.

1950년대 말 독일로 유학을 와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의 귀국길이 막힌 것은 동백림 사건 때문이다.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집에 들이닥쳐 그를 끌고 갔지만 다행히 한국의 감옥행은 면했다. 영세중립국을 표방했던 스위스 정부가 그의 연행에 반발했고, 이를 묵살한 채 끌고 가기엔 한국정부의 부담도 컸기 때문이다. 결국 나흘 동안 호텔 방에서 협박에 시달리다 풀려났지만 고국행은 그것으로 봉쇄되고 말았다.

최기환 선생은 동포운동 내 이론가로 유명하다. 1980년대 초 자비를 들여 민중출판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던 그는 '민중서고'란 이름으로 37권의 단행본을 한국어와 불어 등으로 발간했다. 그중 상당수를 직접 저술했던 그는 특히 제3세계 민족문제와 민족해방운동, 통일운동에 대해 탁월한 이론적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능력이 유감 없이 발휘된 것은 결혼 때. 1961년 제네바대 연구조교로 일하던 그는 당시 제네바대 1학년이었던 부인 미렐라씨(58)를 만나 사랑을 나누었다. 문제는 14살 연하에다 상당한 미인이었던 미렐라씨의 집에서 볼품 없는(?) 동양 청년에게 딸을 줄 수 없다고 나선 것.

독하게 맘 먹고 밀라노의 예비 처가집을 방문한 그는 장인 될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침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그람시가 소재로 등장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장인은 이탈리아 공산당원이었다. 이때 장인은 그람시에 대해 막힘 없이 설명하는 최 선생에게 매료됐고, 그 즉시 결혼을 승낙했다고 한다.

최 선생은 결혼 후 부인과 함께 제네바에서 국제기구 통역과 번역일을 하면서 사회과학 공부에 더욱 몰두했고, 동포운동 내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의 정치상황과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일에 앞장섰다. 특히 그는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씨의 구명을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 앞에서 매일같이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라스코 동굴에 새겨진 '한국의 혼'

음악가 윤이상, 비디오예술가 백남준과 더불어 한국 출신의 유럽 예술계 3대 거목 중 한 사람인 이응로 화백의 조카이기도 한 이희세 선생은 호탕한 성격의 선 굵은 예술가다. 1951년 홍익대 동양화과(1기)에 입학한 그는 재학 당시 학생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적이었지만 교수들로부터 "장차 한국 화단의 판도를 바꿀 재목"이란 평을 들을 만큼 출중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서른의 나이에 모교 강사로 부임했던 그는 1965년 큰아버지인 이응로 화백의 초청으로 파리에 유학 왔다. 그런 그가 동포운동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는 동백림 사건 때문. 당시 이응로 화백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한국으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본 그는 붓 대신 유인물을 들고 한국정부를 규탄했고, 이러한 활동은 30년 이상 지속돼왔다.

이희세 선생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은 1973년부터 3년 동안 참여했던 라스코(Lascaux) 동굴벽화 재생작업이다. 1940년 몽티낙 지방 소년들이 우연히 발견한 라스코 벽화는 스페인의 알타미르 벽화와 더불어 대표적인 선사시대 벽화다. 1~5m에 이르는 말, 사슴, 들소 등이 빼어난 솜씨로 그려져 있는 벽화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벽화의 훼손을 막기 위해 라스코 동굴을 그대로 본뜬 인공동굴을 인근에 만들었다. 이때 벽화 모사작업에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들이 참여했는데, 특히 이희세 선생에게는 벽화의 대표그림이라 할 검붉은 들소 그림이 맡겨졌다. 동양적 신비감이 짙게 깔린 벽화를 제대로 재생할 화가로 이희세 선생만한 인물이 없음을 프랑스 미술계도 인정했던 것이다.

다음날 오후 이우갑 신부와 함께 이희세 선생 집—1973년 동굴벽화 작업을 위해 마련해둔 집—에서 10km 남짓 떨어진 라스코 동굴을 찾았다.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인공동굴은 원래의 동굴과 벽면의 종류석 조각까지 일치하는, 그 자체로도 놀랄 만큼 뛰어났다.

입구에는 프랑스어로 제작과정에 참여한 화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희세 선생의 이름도 눈에 띄었다. 입구에 들어서니 정면에 이 선생의 그림이 전시돼 있었다. 그림의 특징과 의미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강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문득 '고집불통 화가'를 떠올렸다.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이 선생은 붓을 접었던 것이다. 예술적 명성보다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온몸 바치는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기에 20여 년 동안 창작과는 담을 쌓아왔던 화가. 과연 누가 그에게 조국과 예술의 불일치를 강요했단 말인가.

다시 파리로 돌아온 것은 밤 9시. 민박집을 잡아놓고 모처럼 관광에 나섰다. 이날부터 전도시가 크리스마스 경축 불빛을 밝힌 파리의 야경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에펠탑을 거쳐 콩코르드 광장에서 개선문까지 이어지는 샹젤리에 거리를 거닐며 화려한 파리의 불빛에 취하고, 소르본대학 부근 선술집에 들러 스페인식 포도주에도 취해봤지만 내내 머리 속을 맴돈 것은 망명객 화가의 다음 말이었다.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인가... 남은 여생을 이곳에서 그림 그리는 일에만 쏟을 작정입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닐 기력도 없는 늙은이가 되어서야 다시 화폭 앞에서 서게 되는군요."

서울행 비행기는 47년째 '탑승불가'

배드소덴·윈스터는 프랑크푸르트에서 40여km 떨어진 인구 수천 명의 전원마을로 인근에 온천이 자리잡고 있어 퇴직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한적한 시골 역 플랫폼에 내려서자 큰 키의 노신사가 다가왔다.

“안 기자,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는 고국에서 찾아온 기자를 금새 알아봤다. 1948년 감리교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쟁의 참화 속에 목회활동을 하다 1955년 독일로 유학왔던 이영빈 목사(75). 당시 프로펠라 비행기를 타고 서울 여의도비행장을 떠나 도쿄, 마닐라, 방콕, 아바단, 로마, 취리히를 거쳐 프랑크푸르트에 도달하기까지 총 60여 시간이 소요되던 여행길은 이제 10시간 남짓으로 줄어들었지만 그에게 서울행 항공편은 오늘도 '탑승불가'다. 독일사회 내에서는 탁월한 신학자로 알려진 그이지만 한국정부로부터는 여전히 '친북인사'란 규정을 받고 있을 뿐이다.

그의 차를 타고 2~3분 거리인 자택을 향했다. 자택에서는 부인 김순환 선생(73)이 저녁식사 준비에 한창이었다. 감신대 후배이기도 한 김순환 선생은 이 목사에게는 신학연구와 통일운동의 둘도 없는 평생동지다. 노부부가 정성껏 차린 저녁 식탁에 앉자 벽에 걸린 대형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김일성 주석과 이들 부부가 평양 주석궁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1992년 방북 때 찍은 사진입니다. 김 주석께서는 생전에 해외동포 신학자들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노력한 것을 고맙게 여기곤 했죠. 방북 때마다 따뜻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 부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통일대화'다. 1980년 유럽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해외기독교사회(기통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통일운동에 뛰어든 이들은 1981년부터 매년 다섯 차례에 걸친 '북과 해외 기독교인들의 통일대화'를 통해 통일을 위한 초석을 놓았던 것이다.

애초 5년을 예상하고 왔다는 독일생활이 어느덧 46년이 흘렀다. 함경남도 안변군 신고산에서 태어나 해방 이듬해 신학공부를 위해 월남한 이 목사가 겪은 남쪽 생활은 불과 9년. 북에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친척이 살고 있었던 연유로 그동안 몇 차례 방문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짧은 생활이다 보니 내게 남쪽의 조국은 산천의 모습으로 담겨져 있지 않아 역사를, 사회를 혁신하려는 남쪽 사람들이 바로 나의 조국이야. 멀리서나마 그들과 연대하면서 한 줌의 조국애를 불태울 따름이지만 이 조국을 나는 너무도 사랑해.”

하지만 1994년 남쪽 기독교인사들의 초청을 받아 서울을 찾았을 때, 그는 김포공항에서 '입국거부' 당했다. 결국 비행기 차창 너머로 하늘에서 잠시 내려다본 산천이 지난 55년 동안 그가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조국의 실체였다.

“유럽에서도, 한국에서도 우린 영원한 이방인”

루르 지방. 쾰른과 뒤셀도르프, 뒤스부르크, 에센, 보쿰 등 라인강 유역 도시를 따라 펼쳐진 독일 최대의 중공업지역인 이곳은 1960~70년대 광부로 파견된 동포들이 대거 정착한 곳이기도 하다.

뒤스부르크역에 마중 나온 이종현 선생(65)과 함께 우리는 먼저 보쿰에 있는 '한국의 집'을 방문했다. 토요일인 이날은 '한국민중문화모임' 주최로 토론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동포들과 한국의 정치현실을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눈 뒤 뒤스부르크의 이종현 선생 집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

1965년 광부로 독일에 건너온 이 선생은 3년 계약기간을 마친 뒤 뒤스부르크공대에 입학했고, 오랫동안 루르 지방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다. 1975년 재독한인노동자연맹을 결성해 의장을 역임했던 그는 유럽민협 사무국장 및 의장, 한독연대조직인 코리아협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동포운동 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는 지난 시절 동포운동을 떠올리면서 “당시 우리는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었다”고 표현했다. 또 “독일 관청에서 우리들에게 ‘한국영사관을 출입할 때 꼭 2명 이상 함께 가라’고 신신당부할 정도였다”며 씩씩히 웃음지었다. 동백림 사건 당시 한국인 16명을 강제납치했던 중앙정보부의 ‘악명’이 독일사회 내에서도 자자했던 것이다.

그의 회고담을 들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한 포도주가 어느새 6병이 비워졌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튿날 오전 그와 같이 라인강 인근 공업지대를 쪽 둘러봤다. 엄청난 규모의 공장에서 뿜는 연기를 보면서 그가 말했다.

“라인강의 기적에는 한국노동자의 피땀도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한국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이죠.”

점심식사를 위해 집에 돌아오니 그의 부인 우즈라씨(60)가 식탁 가득 한국음식을 장만해놓았다. 두부요리와 각종 나물, 잡채, 미역국, 그리고 텃밭에서 가꾼 배추로 담근 김치... 눈이 휘둥그레진 기자에게 우즈라씨가 웃으며 말했다. “이젠 저도 한국사람이 다 됐어요.”

<월간 말 2001년 2월호 기사>

자료 7

<자료7—한통련 민족시보 기사>

국내대책위, 한통련 문제 본격 다루기로

이 달 29일 서울에서 '해외 한국민주화운동학술회의'가 열린다. 민주화운동으로 한통련 등 해외동포가 해온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원래 한통련 대표가 참가하여 직접 호소해야 할 회의지만, 국가보안법 때문에 입국을 못해 일본에서는 한통련대책위원회(한통련의 명예회복과 한국에의 무조건 자유왕래를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학술회의 취지문에서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이 정도나마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해외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은 동포들의 공이 매우 크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들의 기여를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내 각계인사가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 취소와 명예회복, 성원들의 본국자유왕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국내대책위)를 결성한 이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왔다. '시사 저널' 등 언론에도 소개되는 등 한통련문제는 양심적인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한국정부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강경하다고 한다. 귀국보장에 대해서도 '반성문'을 쓰고, '반국가적 활동'에서의 이탈을 맹세하고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한다.

지난해 국내대책위원회 결성식 참가문제와 관련하여 한통련 대표에 여권발급이 거부된 데 대해 대표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권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에 호소한 것으로 최근 그 심의가 시작됐다. 공판에서 밝혀진 당국의 자세는 6·15공동선언에 따라 열린 남북화해의 새시대를 반영하고 있

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이다.

당국은 '친북 분자'에 의한 '반국가활동'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 이미 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사업도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화운동에 모든 힘을 쏟아온 한통련의 입국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는 시대착오적인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금년 4월 일본에서도 한통련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한국에의 무조건 자유왕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6개월에 걸쳐 전개되었다. 최근 집약되었는데 10만명을 넘는 서명이 모였다. 자치노동조합과 전항만 등 노조, 시민단체, 재일동포들이 중심이 되어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전국에서 예상을 훨씬 넘는 큰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 곧 한통련대책위 대표단이 방한해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인데 정부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족시보 제960호(2001. 11. 21) www.korea-htr.com>